2026. 5.

국회예산정책처 I 인구·고용동향 & 이슈 I 제6호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CONTENTS

인구 동향
고용 동향
지속가능 성장
기술 동향
이슈 분석 | 최근 북한경제의 반등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총괄	정 지 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한 승 룡 경제분석관
작성	한 승 룡 경제분석관 김 상 용 경제분석관 천 경 록 경제분석관 홍 지 은 경제분석관 백 기 홍 경제분석관
지원	김 금 아 행정실무관 강 태 용 자료분석연구원

- 「**NABO 인구 · 고용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02-6788-474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인구 · 고용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Contents

Ⅰ 인구 동향

1. 인구 9
2. 출생·사망·인구이동 13
   [Box 1] 출생 : 출산연령 및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 15
3. 가족 17

Ⅱ 고용 동향

1. 고용량 23
2. 노동력 수급여건 31
3. 임금 및 가구 소득 36
   [Box 2] 청년층 첫 일자리 및 이후 현황 39

Ⅲ 지속가능 성장

1. 기후변화 대응 43
   [Box 3] WMO「전지구 기후현황 보고서 2025」 47
2. 해양생태계 보존 48
3. 육상생태계 보존 51
   [Box 4]「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53

Ⅳ 기술 동향

AI 기술 발전과 노동 57

Ⅴ 이슈 분석

최근 북한경제의 반등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검토 71

2026년 5월호 **통권 제6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인구·고용 동향 종합

최근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반등세를 보이나,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수도권 일부 및 충청권을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고용은 보건·복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증가폭은 낮은 수준에 그치며 청년층 고용 부진도 지속되고 있음.

인구

- 2026년 4월 「주민등록인구」는 5,11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2026년 4월 「유소년 인구」, 「생산연령 인구」, 「고령 인구」 비율은 각각 10.1%, 68.2%, 21.7%
- 2026년 2월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며, 2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6년 2월 「사망자 수」는 2.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만 명 감소
- 2026년 2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811건 감소하여 23개월만에 감소가 나타남

고용

- 2026년 4월 「취업자 수」는 7.4만 명 증가로 16개월 연속 증가세는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침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6.1만 명)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제조·내수업종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1.5만 명)이 부진함
- 2026년 4월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
  - 2026년 4월 「확장실업률」은 8.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2026년 3월 「채용」은 건설업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8만 명(7.4%) 증가
  - 2026년 3월 「빈일자리율」은 0.8%로 전년동월대비(0.85%) 소폭 하락
- 2026년 2월 「임금」은 특별급여의 큰 폭 증가(140.7%) 속에 전년동월대비 17.8% 상승

지속가능 성장

- ‘SDG13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고온 현상 심화와 높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지속
  - 2025년 연평균 기온은 역대 2위, 폭염·열대야는 각각 역대 3위·4위를 기록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이나 세계 13위 수준을 유지
- ‘SDG14 해양생태계 보존’ 부문에서, 어업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어족자원의 불안정성과 자원 감소 우려가 지속
  - 전체 어업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오징어 등 일부 어종의 총허용어획량소진율 하락이 장기화되어 자원 감소 우려 확대
- ‘SDG15 육상생태계 보호’ 부문에서, 보호지역 지정 수준이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생태계 보전 기반이 취약
  - 한국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내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산악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낮아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 확대 필요성이 부각됨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주요 인구·고용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감, 만 명)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2Q	3Q	4Q	1월	2월	3월	4월
주민등록인구	−10.8 (−0.21)	−10.0 (−0.19)	10.7 (−0.21)	−9.7 (−0.19)	−10.0 (−0.19)	−9.7 (−0.19)	−8.6 (−0.17)	−8.2 (−0.16)	−7.8 (−0.15)
주민등록세대 수	20.4 (0.85)	18.1 (0.75)	18.1 (0.75)	18.1 (0.75)	18.1 (0.75)	18.7 (0.78)	18.0 (0.75)	20.1 (0.83)	21.4 (0.88)
출생아 수	0.8 (3.6)	1.6 (6.8)	0.4 (7.7)	0.4 (6.5)	0.3 (4.9)	0.3 (11.7)	0.3 (13.6)		
사망자 수	0.6 (1.7)	0.5 (1.3)	0.1 (0.6)	−0.4 (−4.9)	0.1 (1.5)	−0.7 (−17.6)	−0.1 (−3.5)		
혼인 건수	2.9 (14.8)	1.8 (8.1)	0.3 (5.8)	0.7 (12.7)	0.4 (5.8)	0.2 (12.4)	−0.1 (−4.2)		
취업자 수	15.9 (0.6)	19.3 (0.7)	20.7 (0.7)	21.6 (0.8)	19.5 (0.7)	10.8 (0.4)	23.4 (0.8)	20.6 (0.7)	7.4 (0.3)
월평균 채용	−7.0	−3.5	−4.9	−2.0	4.8	1.6	2.9	7.8	
실업률(%)	2.8	2.8	2.8	2.2	2.9	4.1	3.4	3.0	2.9
경제활동참가율(%)	64.5	64.7	65.4	64.9	64.6	63.6	64.0	64.6	64.9
빈일자리율(%)	1.0	0.8	0.8	0.8	0.8	0.7	0.8	0.8	
명목임금 상승률(%)	2.9	3.1	2.7	0.4	4.7	−7.6	17.8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Ⅰ 인구 동향

요약

2026년 4월 주민등록인구는 5,110만 명이며, 전년동월대비 7.8만 명(-0.2%) 감소

- 주민등록인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4.4월)-12.3→('25.4월)-10.9→('26.4월)-7.8

2026년 4월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10.1%, 68.2%, 21.7%

- 유소년인구 비율(%): ('24.4월)10.9→('25.4월)10.5→('26.4월)10.1
- 생산연령인구 비율(%): ('24.4월)69.8→('25.4월)69.0→('26.4월)68.2
- 고령인구 비율(%): ('24.4월)19.3→('25.4월)20.4→('26.4월)21.7

2026년 4월 주민등록세대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1% 미만으로 유지

- 주민등록세대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세대): ('24.1월)21→('25.1월)19→('26.1월)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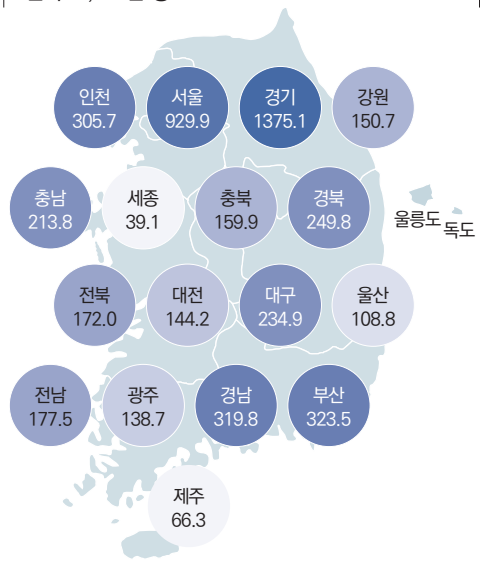
2026년 2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76개월째 하회하여 인구의 자연감소 지속

- 출생아 수(천 명): ('24.2월)19.4→('25.2월)20.2→('26.2월)22.9
- 사망자 수(천 명): ('24.2월)29.9→('25.2월)30.2→('26.2월)29.2
- 인구의 자연증감(천 명): ('24.2월)-10.5→('25.2월)-10.2→('26.2월)-6.3

2026년 2월 혼인 건수는 2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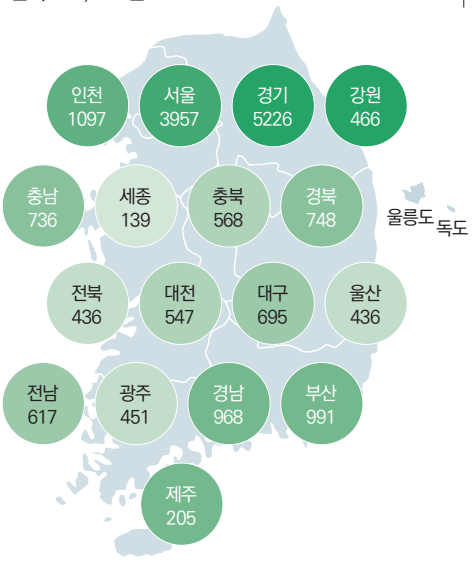
- 혼인 건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 건): ('24.2월)-0.9→('25.2월)2.4→('26.2월)-0.8

주민등록인구(2026.4.) (만 명)
전국: 5,110만 명



자료: 행정안전부

혼인 건수(2026.2.) (건수)
전국: 18,557건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요 용어

인구

- **총인구:** 11월 1일 0시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의 총합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포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은 제외. 총인구는 매년 작성 기준년 다음 해 7월에 공표
-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를 집계하여 작성한 인구수로 외국에 유학이나 취업으로 출국한 내국인을 포함

인구 구조

-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유소년인구는 0~14세 인구,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 인구,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

출생·사망·혼인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출생률:** 1년간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
- **조출생률·조사망률·조혼인율·조이혼율:**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사망자 수·혼인 건수·이혼 건수
- **인구 자연증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치
- **기대여명:**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0세 출생아의 기대여명이 기대수명

가족·가구

- **총가구:** 총가구는 11월 1일 0시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의 총합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 구성되어 있는 가구도 포함
- **가구와 세대:**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세대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주민등록편람). 가구와 세대의 개념적 차이는 없으나, 주민등록세대에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Ⅰ 인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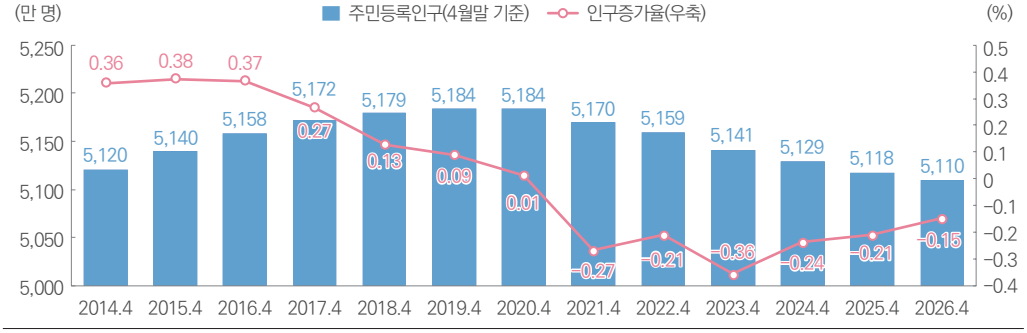
CHAPTER
01 인구

가. 주민등록인구

2026년 4월 주민등록인구는 5,110만 명이며, 전년동월대비 8만 명(-0.2%) 감소

- 2026년 4월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4월 이후 6년 연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다소 낮아짐
  - 주민등록인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4.4월)-12.3(-0.24)→('25.4월)-10.9(-0.21)→('26.4월)-7.8(-0.15)

그림 1 |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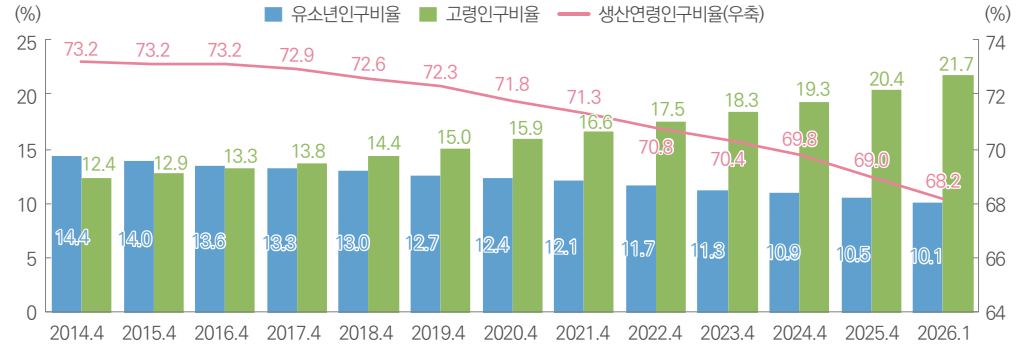


주: 각 연도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26년 4월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비율은 각각 10.1%, 68.2%, 21.7%

- 2026년 4월 유소년인구 비율은 10.1%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유소년인구 비율(%): ('24.4월)10.9→('25.4월)10.5→('26.4월)10.1
- 2026년 4월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68.2%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 생산연령인구 비율(%): ('24.4월)69.8→('25.4월)69.0→('26.4월)68.2
- 2026년 4월 고령 인구 비율은 21.7%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고령 인구 비율(%): ('24.4월)19.3→('25.4월)20.4→('26.4월)21.7

그림 2 |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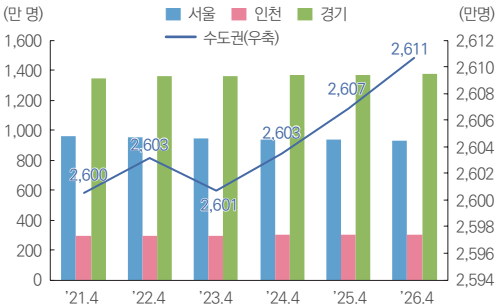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 단위로는 수도권, 충청권 인구는 증가 추세이며, 그 밖의 지역은 인구 감소 추세

- 서울 인구는 감소하지만, 인천과 경기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1] 2,61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4% 증가
  - 수도권 인구(만 명): ('24.4월)2,603→('25.4월)2,609→('26.4월)2,611
  - 서울 인구(만 명): ('24.4월)938→('25.4월)933→('26.4월)930
  - 인천 인구(만 명): ('24.4월)301→('25.4월)303→('26.4월)306
  - 경기 인구(만 명): ('24.4월)1,365→('25.4월)1,370→('26.4월)1,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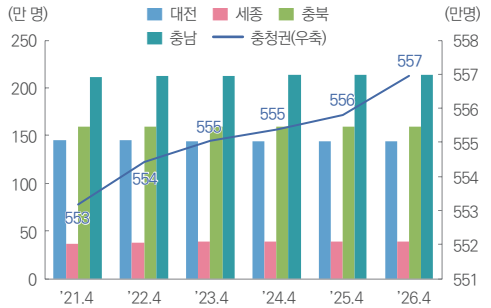
- 충청권[2] 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55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1% 증가
  - 충청권 인구(만 명): ('24.4월)555→('25.4월)556→('26.4월)557
  - 대전 인구(만 명): ('24.4월)144→('25.4월)144→('26.4월)144
  - 세종 인구(만 명): ('24.4월)39→('25.4월)39→('26.4월)39
  - 충북 인구(만 명): ('24.4월)159→('25.4월)159→('26.4월)160
  - 충남 인구(만 명): ('24.4월)213→('25.4월)214→('26.4월)214

그림 3 | 수도권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4 | 충청권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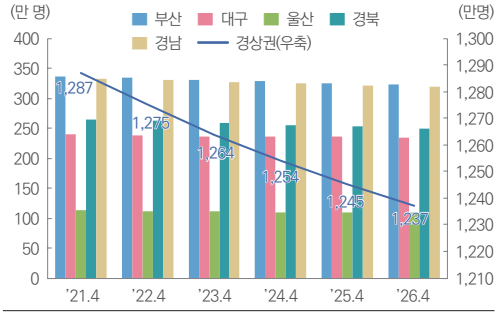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1]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구성

[2]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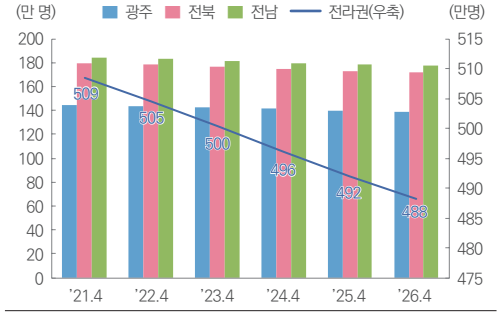
- 경상권[3] 인구는 감소하여 1,23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6% 감소
  - 경상권 인구(만 명): ('24.4월)1,254→('25.4월)1,245→('26.4월)1,237
  - 부산 인구(만 명): ('24.4월)328→('25.4월)326→('26.4월)324
  - 대구 인구(만 명): ('24.4월)237→('25.4월)236→('26.4월)235
  - 울산 인구(만 명): ('24.4월)110→('25.4월)109→('26.4월)109
  - 경북 인구(만 명): ('24.4월)255→('25.4월)252→('26.4월)250
  - 경남 인구(만 명): ('24.4월)324→('25.4월)322→('26.4월)320
- 전라권[4]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여 48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74% 감소
  - 전라권 인구(만 명): ('24.4월)496→('25.4월)492→('26.4월)488
  - 광주 인구(만 명): ('24.4월)141→('25.4월)140→('26.4월)139
  - 전북 인구(만 명): ('24.4월)175→('25.4월)173→('26.4월)172
  - 전남 인구(만 명): ('24.4월)180→('25.4월)179→('26.4월)178
- 강원도와 제주도의 인구는 감소 추세로 각각 151만명, 66만 명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32%, 0.64% 감소
  - 강원 인구(만 명): ('24.4월)152→('25.4월)151→('26.4월)151
  - 제주 인구(만 명): ('24.4월)67→('25.4월)67→('26.4월)66

그림 5 | 경상권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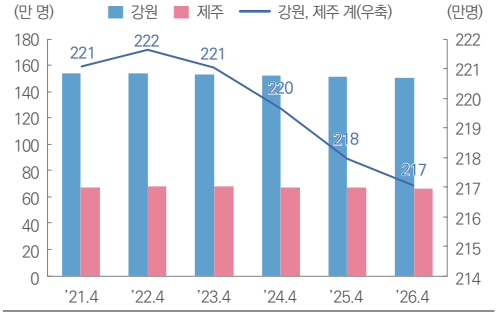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6 | 전라권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7 | 강원도, 제주도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3] 경상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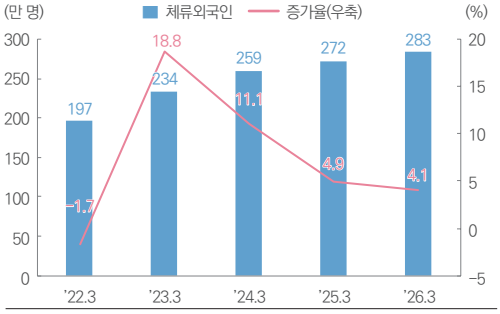
[4] 전라권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로 구성

나. 체류외국인

➲ 2026년 3월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8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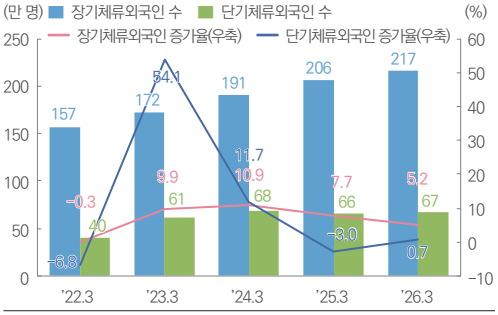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 체류외국인 수(만 명): ('24.3월)259→('25.3월)272→('26.3월)283
  - 체류외국인 증가율(%): ('24.3월)11.1→('25.3월)4.9→('26.3월)4.1
  - 장기체류 외국인 수(만 명): ('24.3월)191→('25.3월)206→('26.3월)217
  - 단기체류 외국인 수(만 명): ('24.3월)68→('25.3월)66→('26.3월)67

그림 8 | 체류외국인 수 및 증가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그림 9 |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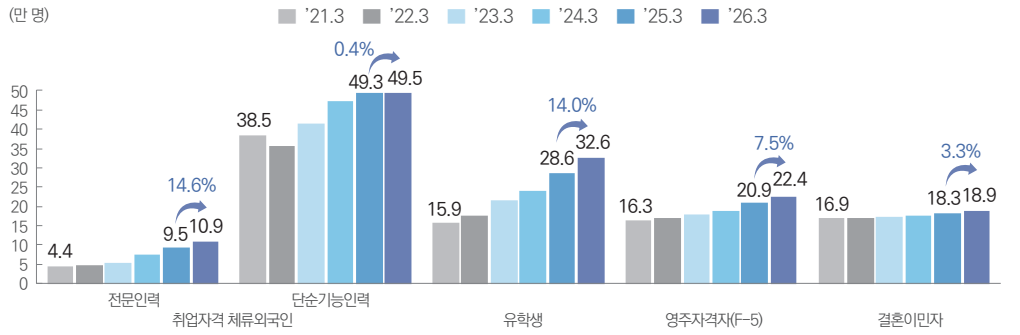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 체류자격별로 전문인력 외국인과 유학생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두자리 수 기록

- 2026년 3월말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체류자격별로 전문인력 취업자격외국인은 전년동월대비 14.6%, 단순기능 취업자격외국인은 0.4% 증가했으며, 유학생은 14.0%, 영주권자는 7.5%, 결혼이민자는 3.3% 증가
  - 취업자격외국인은 60만 명이며, 유학생은 33만 명, 영주자격자 22만 명, 결혼이민자 19만 명 순

그림 10 | 체류자격별 현황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CHAPTER
02 출생·사망·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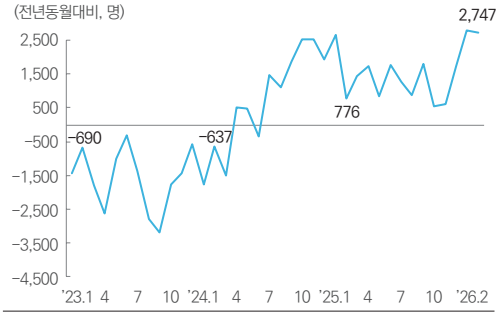
가. 출생 및 사망

➲ 2026년 2월 출생아 수는 20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유지

- 2월 출생아 수는 22,89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47명(13.6%) 증가
  -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 명): ('24.2월)-0.6→('25.2월)0.8→('26.2월)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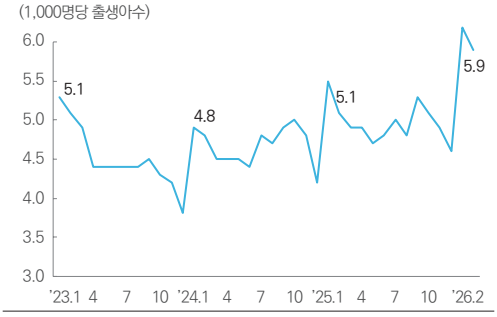
- 2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2월 기준으로는 2019년(6.5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년동월대비 0.8명 증가
  - 조출생률(명): ('24.2월)4.8→('25.2월)5.1→('26.2월)5.9

그림 11 | 출생아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2 | 조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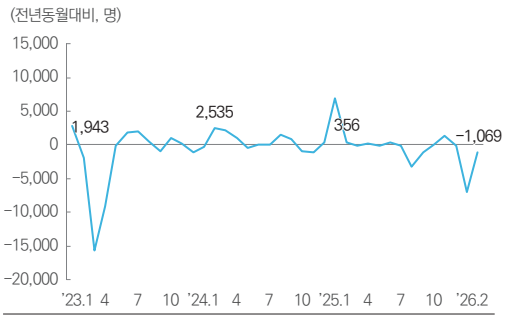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6년 2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 2월 사망자 수는 29,17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69명(3.5%) 감소
  -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 명): ('24.2월)2.5→('25.2월)0.4→('26.2월)-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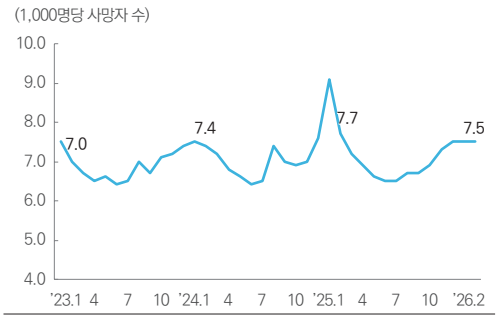
- 2월 조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명 감소
  - 조사망률(명): ('24.2월)7.4→('25.2월)7.7→('26.2월)7.5

그림 13 | 사망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4 | 조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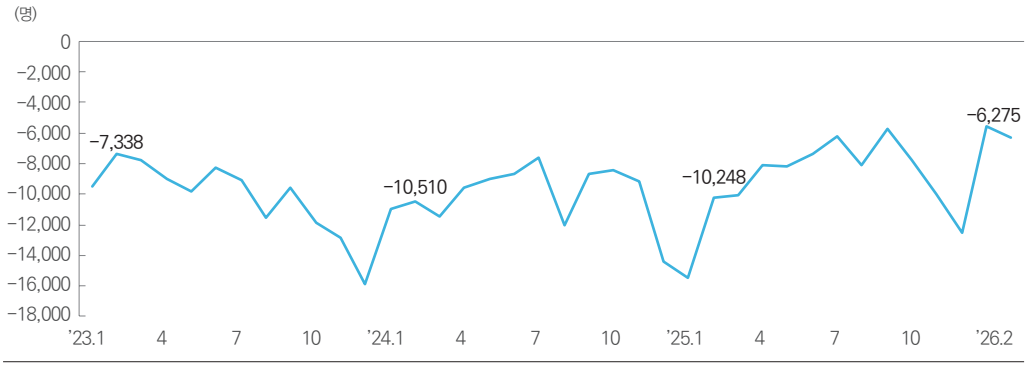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2026년 2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76개월째 하회하여 인구의 자연감소 지속

- 2월 인구의 자연증가는 −6,275명이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3,973명 증가
  - 인구의 자연증가 건수(천 명): ('24.2월)-10.5→('25.2월)-10.2→('26.2월)-6.3

그림 15 | 인구의 자연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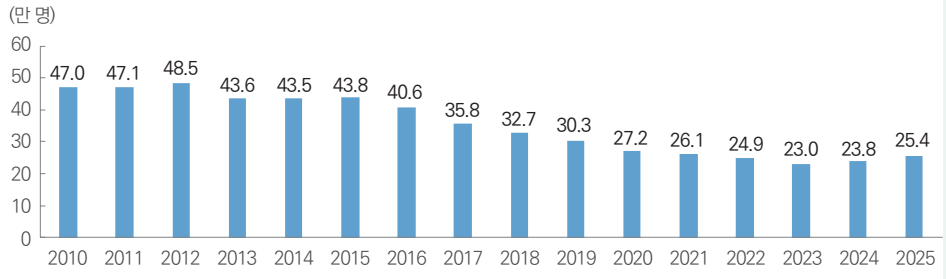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Box 1] 출생 : 출산연령 및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

2025년 출생아 수는 25.4만 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

-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며, 출생아 수 증가율도 증가추세
  - '24년 출생아 수는 23.8만 명으로 전년대비 3.6% 증가

연도별 출생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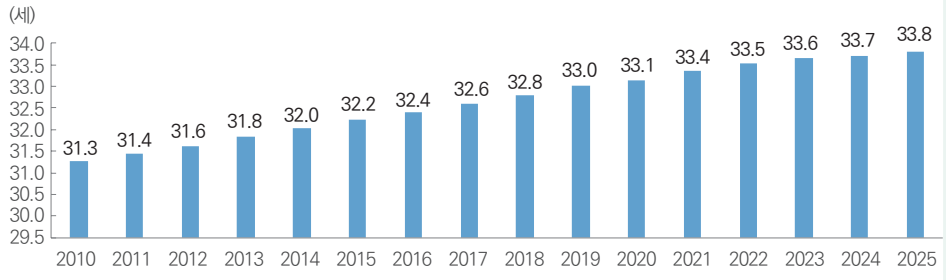


주: 2025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8세로 전년대비 0.1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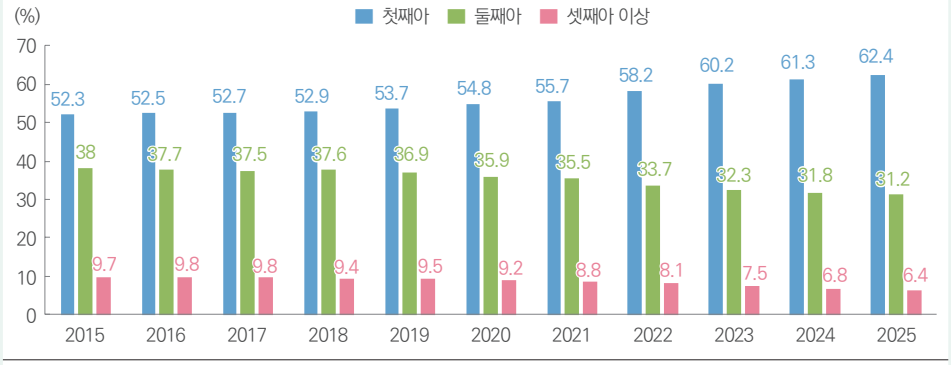
- 2025년 전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은 62.4%로 전년대비 1.1%p 증가한 가운데, 둘째아 이상의 출생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
  - 2025년 출생아 수는 증가했으나, 평균 출산연령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년대비 모든 출생 순위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둘째아 및 셋째아 출생 비중은 감소하고 첫째아 출생아 비중은 증가한 모습
- 출산 시기의 지연은 추가 출산 가능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첫째아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3.2세로 전년대비 0.1세 증가

연도별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주: 2025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도별 출산 순위별 비중 추이



주: 2025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결혼 생활 기간별 출생아 수는 결혼 후 2년 미만에 낳는 출생아 수가 8.7만 명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

- 결혼 기간별 출생아 비율 중 2년 미만 출생아 비중은 36.1%이며, 전년대비 1.1%p 증가
  - 결혼 기간 2~5년 미만 출생아 비중은 37.4%, 5년 이상 출생아 비중은 26.5%
-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 이후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모습
  - 2020년 결혼 생활 2~5년 미만 기간에 태어난 출생아 수와 결혼 기간 2년 미만 기간에 태어난 출생아 수 차이가 1.7만 명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그 차이가 0.3만 명으로 좁혀짐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아 수

(단위: 천 명,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4년대비	
							증감	증감률
계*	272.3	260.6	249.2	230.0	238.3	254.5	16.1	6.8
2년 미만	90.4	80.9	75.8	74.7	79.1	87.2	8.1	10.2
2-5년 미만	108.2	103.9	98.7	85.8	86.5	90.5	4.0	4.7
5년 이상	68.0	69.3	66.2	60.1	60.6	64.2	3.7	6.1

주: 1) 2025년 수치는 잠정치
2) 법적인 결혼 여부와 관련 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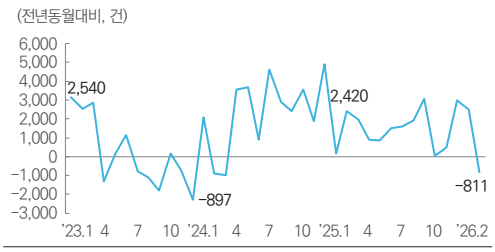
CHAPTER
03 가족

가. 혼인 및 이혼

➲ 2026년 2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811건 감소하여 23개월만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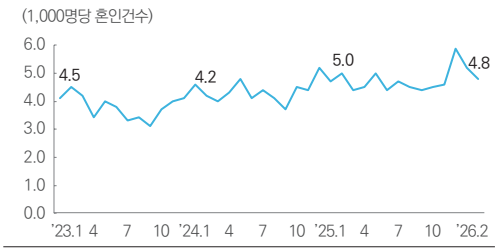
- 2월 혼인 건수는 18,55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11건 감소
  - 혼인 건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 건): ('24.2월)-0.9→('25.2월)2.4→('26.2월)-0.8
- 2월 조혼인율[5]은 4.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명 감소
  - 조혼인율(명): ('24.2월)4.2→('25.2월)5.0→('26.2월)4.8

그림 16 | 혼인 건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7 |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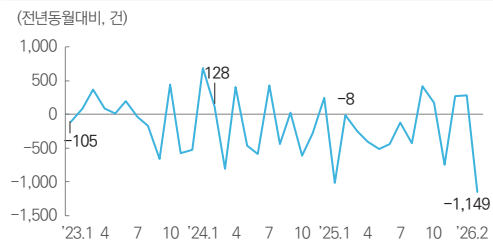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6년 2월 이혼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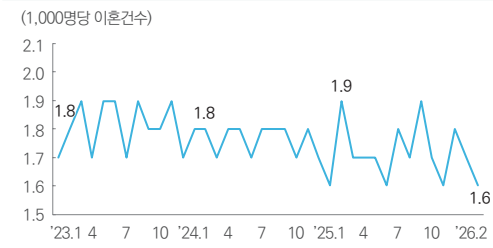
- 2월 이혼 건수는 6,19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149건 감소
  - 이혼 건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 건): ('24.2월)0.1→('25.2월)0.0→('26.2월)-1.1
- 2월 조이혼율[6]은 1.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명 감소
  - 조이혼율(명): ('24.2월)1.8→('25.2월)1.9→('26.2월)1.6

그림 18 | 이혼 건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9 | 조이혼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5]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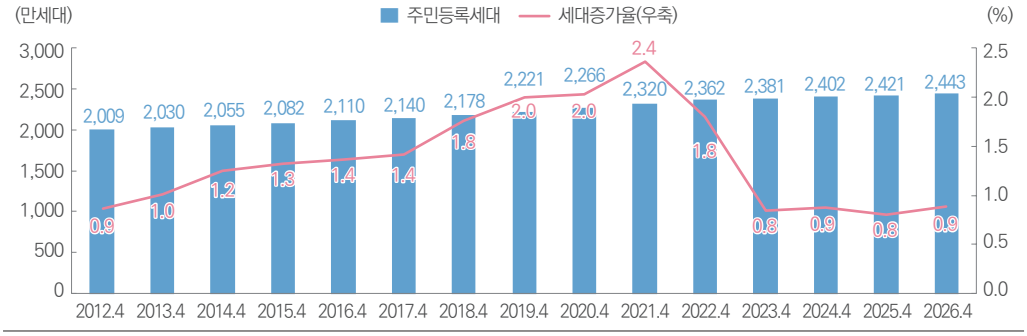
[6]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

나. 가구 수

➲ 2026년 4월 주민등록세대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1% 미만으로 유지

- 2026년 4월 주민등록세대는 2,443만 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1만 세대 증가
  - 주민등록세대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세대(%)): ('24.4월)20.7(0.9)→('25.4월)19.1(0.8)→('26.4월)21.4(0.9)

그림 20 | 주민등록세대 및 세대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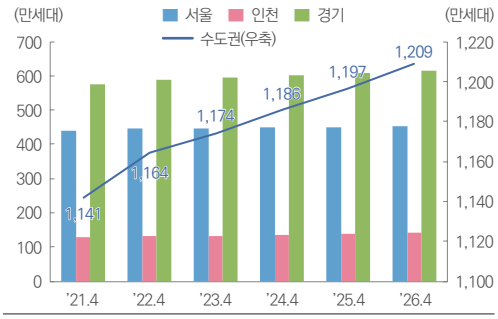
주: 각 연도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 지역 단위로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등록세대 수가 증가

- 수도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1,209만 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수도권 (만 세대): ('24.4월)1,186→('25.4월)1,197→('26.4월)1,209
  - 서울 (만 세대): ('24.4월)449→('25.4월)450→('26.4월)452
  - 인천 (만 세대): ('24.4월)136→('25.4월)139→('26.4월)141
  - 경기 (만 세대): ('24.4월)601→('25.4월)608→('26.4월)616
- 충청권 모든 지역의 세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청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274만 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충청권 (만 세대): ('24.4월)267→('25.4월)271→('26.4월)274
  - 대전 (만 세대): ('24.4월)68→('25.4월)69→('26.4월)70
  - 세종 (만 세대): ('24.4월)16→('25.4월)16→('26.4월)17
  - 충북 (만 세대): ('24.4월)78→('25.4월)79→('26.4월)80
  - 충남 (만 세대): ('24.4월)104→('25.4월)106→('26.4월)107
- 경상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606만 세대로 전년동월대비 0.7%증가
  - 경상권 (만 세대): ('24.4월)598→('25.4월)602→('26.4월)606
  - 부산 (만 세대): ('24.4월)157→('25.4월)157→('26.4월)158
  - 대구 (만 세대): ('24.4월)110→('25.4월)111→('26.4월)112
  - 울산 (만 세대): ('24.4월)49→('25.4월)50→('26.4월)50
  - 경북 (만 세대): ('24.4월)129→('25.4월)130→('26.4월)130
  - 경남 (만 세대): ('24.4월)153→('25.4월)154→('26.4월)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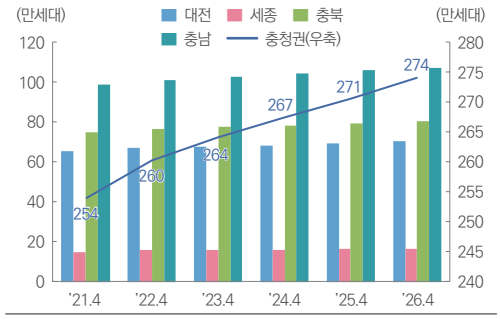
- 전라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245만 세대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전라권 (만 세대): ('24.4월)243→('25.4월)244→('26.4월)245
  - 광주 (만 세대): ('24.4월)66→('25.4월)66→('26.4월)66
  - 전북 (만 세대): ('24.4월)86→('25.4월)87→('26.4월)87
  - 전남 (만 세대): ('24.4월)91→('25.4월)91→('26.4월)91
- 강원도와 제주도의 주민등록세대 수는 각각 77만 세대, 32만 세대로 전년동월대비 0.9%, 0.5% 증가
  - 강원 (만 세대): ('24.4월)76→('25.4월)77→('26.4월)77
  - 제주 (만 세대): ('24.4월)31→('25.4월)32→('26.4월)32

그림 21 | 수도권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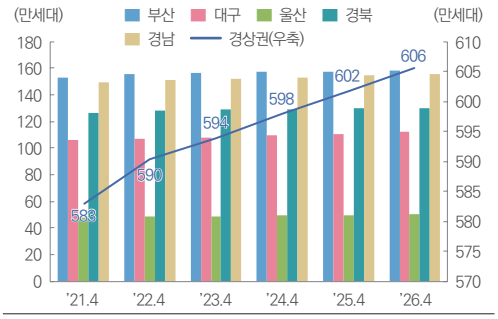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22 | 충청권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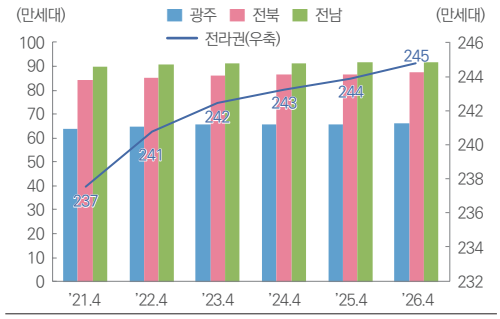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23 | 경상권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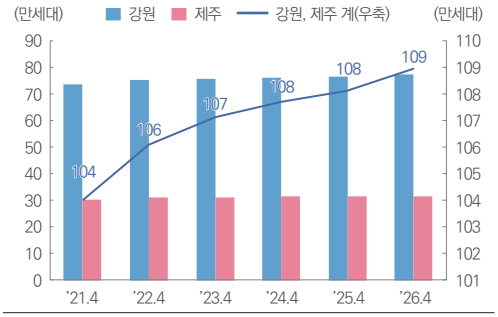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24 | 전라권 세대 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25 | 강원도, 제주도 세대 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Ⅱ 고용 동향

요약

고용 동향(2026.04)

2026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고용 감소로 7.4만 명 증가에 그침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23.4→(3월)20.6→(4월)7.4
- 성·연령대별로는 남녀 모두 20대 및 70세 이상의 고용률이 감소한 가운데 남성은 30대 고용률도 감소
-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26.1만), 예술·스포츠·여가업(5.4만)이 고용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전문과학기술업(-11.5만)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5.5만), 도소매업(-5.2만) 등에서도 감소

2026년 1월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 확장실업률은 8.3%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 청년 실업률은 7.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16.1%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2026년 3월 채용은 건설업 중심으로 증가, 빈일자리율은 감소세 유지

-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6→(2월)2.9→(3월)7.8
- 빈일자리율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1월)-0.2→(2월)-0.1→(3월)-0.05

2026년 2월 임금은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140.7%)한 가운데 17.8% 상승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3.1→('26.1월)-7.6→(2월)17.8

주요 용어

고용량 관련

- **15세 이상 인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단, 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자, 학생, 취업준비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등)
- **경제활동인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로서, 취업자 또는 실업자를 말함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 이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하였거나, 일시휴직 등의 이유로 쉬었지만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경우 포함)와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 **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 **확장실업률**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와 잠재구직자(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
- **구인배수:** 신규 구직 건수 대비 신규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

노동력 수급 관련

- **입직률:** 현직에 있는 근로자 대비 채용·재배치 등에 의해 신규 영입되는 근로자 비율

$= \frac{\text{조사기준월 입직자}}{\text{(조사기준월 근로자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2}} \times 100\ (\%)$

- **이직률:** 현직에 있는 근로자 대비 퇴사·이직·재배치 등에 의해 현직을 이탈하는 근로자(이직자) 비율

$= \frac{\text{조사기준월 이직자}}{\text{(조사기준월 근로자 + 조사기준전월 근로자)/2}} \times 100\ (\%)$

- **빈일자리율:** 전체 일자리 중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빈일자리) 비중으로, 구인난의 한 지표

$= \frac{\text{빈일자리}}{\text{근로자현원 + 빈일자리}} \times 100\ (\%)$

Ⅱ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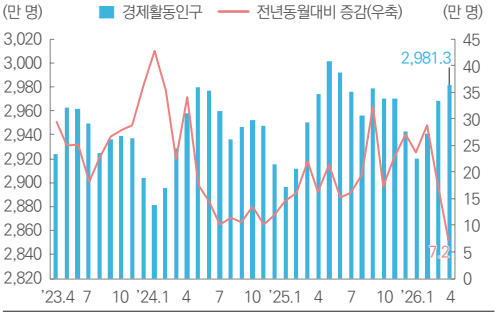
CHAPTER
01 고용량

가. 고용총량

➲ 2026년 4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7.2만 명, 취업자 수는 7.4만 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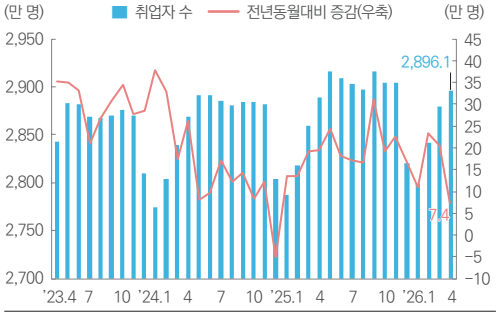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는 2,981.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만 명(0.2%) 증가
  - 경제활동인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28.7→(3월)17.2→(4월)7.2
- 경제활동참가율은 64.9%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2월)0.3→(3월)0.0→(4월)-0.2
- 취업자 수는 2,896.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만 명(0.3%)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23.4→(3월)20.6→(4월)7.4
- 고용률은 63.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2월)0.1→(3월)0.2→(4월)-0.2
-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
  - 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2월)0.2→(3월)-0.1→(4월)0.0
- 청년(15~29세) 실업률은 7.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청년 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2월)0.7→(3월)0.1→(4월)-0.2

그림 1 |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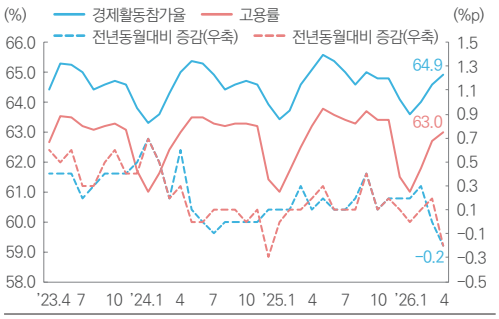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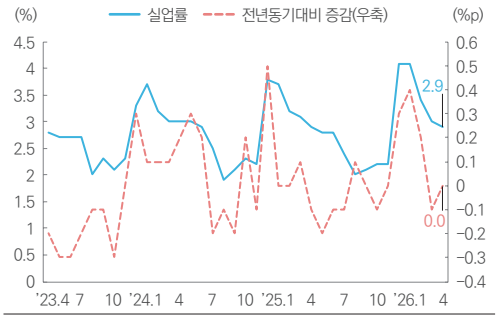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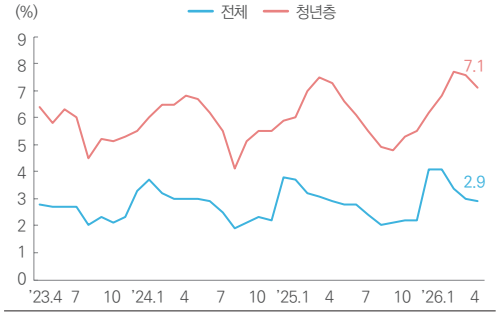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고용보조지표

2026년 4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전체 인구와 청년층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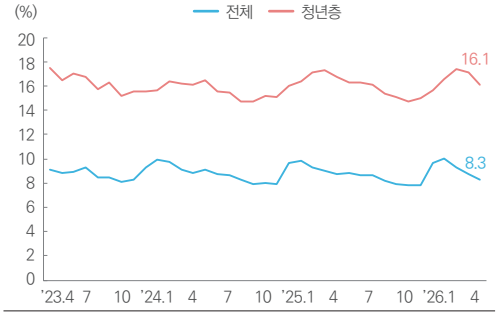
- 전체 확장실업률은 8.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16.1%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전체 확장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2월)0.0→(3월)-0.3→(4월)-0.4
  - 청년층 확장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2월)0.3→(3월)-0.2→(4월)-0.7

그림 5 |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비교



주: 청년층은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 | 확장실업률 및 청년 확장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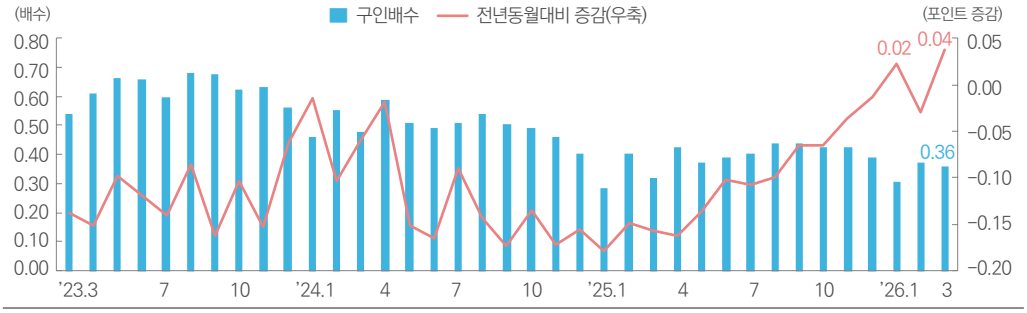
주: 청년층은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2026년 3월 워크넷 구인배수는 전년동월대비 0.04 포인트 상승

- 구인배수는 0.36(구직자 100명당 36개의 일자리)으로 전년동월대비 0.04 포인트 상승
  - 구인배수(전년동월대비, 포인트 증감): ('26.1월)0.02→(2월)-0.03→(3월)0.04

- 구인배수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하락하였으나 2026년 1월 0.02 포인트 상승하여 3년만에 상승 전환

그림 7 | 구인배수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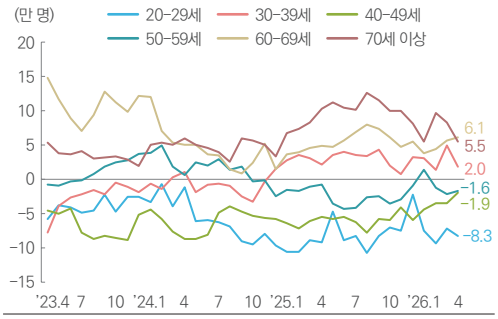
다. 성·연령별 취업자

➲ 2026년 4월 취업자 수는 남녀 모두 20대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0세 이상은 증가세 유지

- 남성은 20대 및 40~50대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0세 이상은 증가세 유지
  - 2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9.4→(3월)-7.2→(4월)-8.3
  - 30대: ('26.2월)1.5→(3월)5.1→(4월)2.0
  - 40대: ('26.2월)-3.4→(3월)-3.4→(4월)-1.9
  - 50대: ('26.2월)-1.2→(3월)-2.1→(4월)-1.6
  - 60대: ('26.2월)4.4→(3월)5.6→(4월)6.1
  - 70세 이상: ('26.2월)9.8→(3월)8.4→(4월)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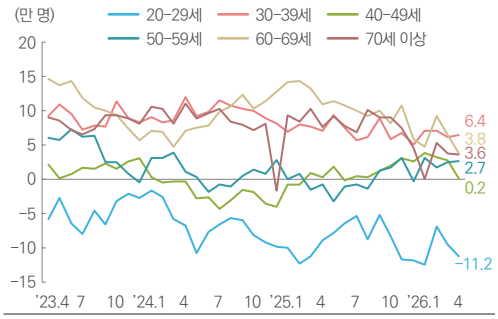
- 여성은 20대 취업자 수의 감소세 이어지는 가운데 40대는 증가폭 축소,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세 지속
  - 2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6.9→(3월)-9.5→(4월)-11.2
  - 30대: ('26.2월)7.1→(3월)6.1→(4월)6.4
  - 40대: ('26.2월)3.4→(3월)2.9→(4월)0.2
  - 50대: ('26.2월)1.8→(3월)2.6→(4월)2.7
  - 60대: ('26.2월)9.2→(3월)6.5→(4월)3.8
  - 70세 이상: ('26.2월)5.3→(3월)3.8→(4월)3.6

그림 8 |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남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9 |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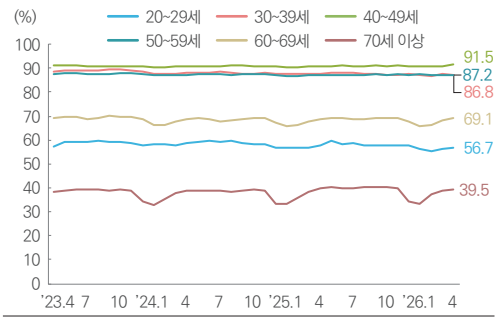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6년 4월 고용률은 남녀 모두 20대 및 70세 이상에서 하락한 가운데 남성은 30대에서도 하락, 여성 고용률은 30대~50대 중심으로 상승

- 남성 고용률은 20대 및 30대가 각각 1.0%p, 0.8%p 하락, 40대는 0.6%p 상승, 70세 이상은 0.6%p 하락
  - 20대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2월)-1.5→(3월)-0.6→(4월)-1.0
  - 30대: ('26.2월)-1.0→(3월)-0.1→(4월)-0.8
  - 40대: ('26.2월)0.3→(3월)0.2→(4월)0.6
  - 50대: ('26.2월)0.3→(3월)0.1→(4월)0.3
  - 60대: ('26.2월)0.0→(3월)0.2→(4월)0.3
  - 70세 이상: ('26.2월)1.2→(3월)0.5→(4월)-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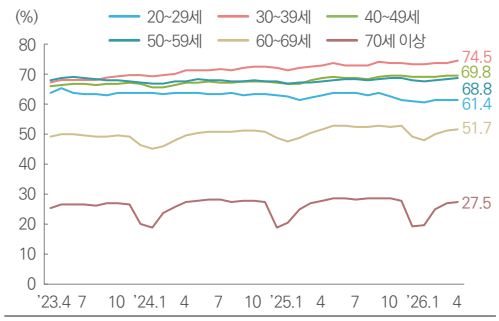
- 여성 고용률은 20대와 70세 이상이 각각 1.6%p, 0.4%p 하락한 반면 30대~50대의 상승폭이 1.1~1.4%p로 두드러짐
  - 20대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2월)-0.1→(3월)-1.0→(4월)-1.6
  - 30대: ('26.2월)1.7→(3월)1.3→(4월)1.4
  - 40대: ('26.2월)2.1→(3월)1.9→(4월)1.2
  - 50대: ('26.2월)0.9→(3월)1.0→(4월)1.1
  - 60대: ('26.2월)1.5→(3월)0.9→(4월)0.2
  - 70세 이상: ('26.2월)0.1→(3월)-0.3→(4월)-0.4

그림 10 |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남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1 |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여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라. 산업별 취업자

➲ **2026년 4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업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대폭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도 감소**

- 보건·사회복지업은 26.1만 명 증가하여 고용 성장을 주도
  -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28.8→(3월)29.4→(4월)26.1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11.5만 명 감소하여 통계 작성(2013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7]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10.5→(3월)-6.1→(4월)-11.5

- 제조업 취업자 수는 5.5만 명 감소하여 13개월째 감소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1.6→(3월)-4.2→(4월)-5.5

- 건설업 취업자 수는 0.8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 축소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4.0→(3월)-1.6→(4월)-0.8

- 도소매업은 5.2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 확대
  - 도소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2.2→(3월)-1.8→(4월)-5.2

- 예술·스포츠·여가업은 5.4만 명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예술·스포츠·여가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7.0→(3월)4.4→(4월)5.4

[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내에는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광고 등),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

표 1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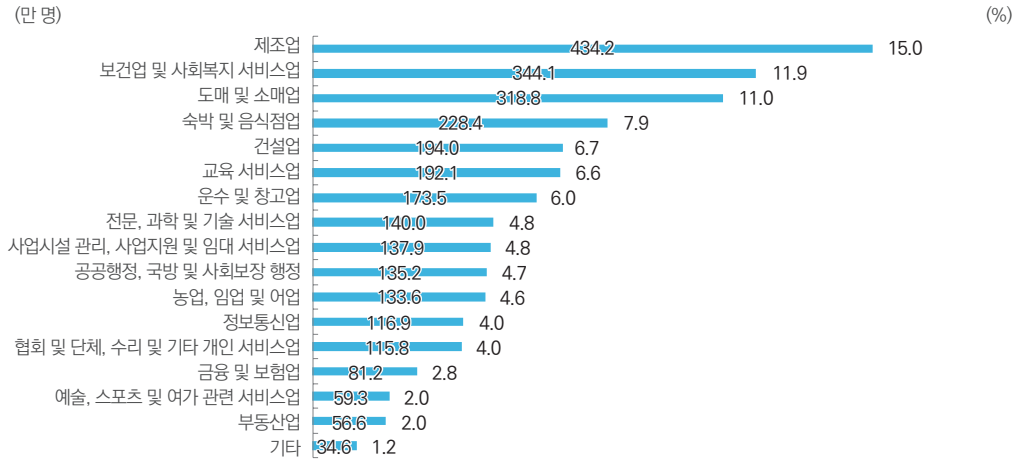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대비, 만 명)

산업별	'25.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	4월
농업, 임업 및 어업	-13.5	-14.1	-12.7	-13.8	-14.6	-12.4	-13.2	-11.7	-10.7	-9.0	-5.8	-9.2
제조업	-6.7	-8.3	-7.8	-6.1	-6.1	-5.1	-4.1	-6.3	-2.3	-1.6	-4.2	-5.5
건설업	-10.6	-9.7	-9.2	-13.2	-8.4	-12.3	-13.1	-6.3	-2.0	-4.0	-1.6	-0.8
도매 및 소매업	1.8	1.0	1.3	0.0	2.8	4.6	1.1	4.4	2.3	2.2	-1.8	-5.2
운수 및 창고업	0.6	-0.1	2.7	0.5	1.0	1.4	4.1	7.2	7.1	8.1	7.5	1.8
숙박 및 음식점업	-6.7	-3.8	-7.1	0.0	2.6	2.2	-2.2	-2.2	-1.6	-2.7	-0.2	-2.9
정보통신업	4.9	1.9	1.6	-1.6	-1.3	-0.4	2.2	0.7	-2.1	-4.2	0.3	1.8
금융 및 보험업	7.2	5.4	3.8	3.2	3.0	3.4	4.9	2.8	1.8	2.2	0.9	0.2
부동산업	-0.5	0.6	2.9	4.0	3.0	1.1	0.2	1.1	3.0	3.5	3.4	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7	10.2	9.1	3.1	2.9	-0.2	0.2	-5.6	-9.8	-10.5	-6.1	-11.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	-0.1	-2.3	-1.4	1.9	1.4	6.3	4.9	4.2	4.2	2.1	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	1.7	-0.5	0.2	0.6	0.2	-0.3	-0.4	-4.1	-3.0	-7.7	-1.7
교육 서비스업	7.0	7.2	3.7	4.8	5.6	1.2	0.7	2.2	3.6	5.8	1.7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3	21.6	26.3	30.4	30.4	28.0	28.1	22.0	18.5	28.8	29.4	2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	0.4	3.1	1.6	7.5	7.0	6.1	5.5	4.5	7.0	4.4	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2.5	0.9	3.2	-0.1	-1.3	0.6	0.5	1.1	-1.4	0.1	0.5
기타	1.4	2.0	1.5	1.7	0.5	0.5	0.7	-2.0	-2.6	-2.1	-2.0	0.6
계 (전체 취업자 수 증감)	24.5	18.3	17.1	16.6	31.2	19.3	22.5	16.8	10.8	23.4	20.6	7.4

주: '기타'는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2 | 산업별 취업자 수 및 비중



주: 1. 2026년 4월 기준
2. '기타'는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 고용형태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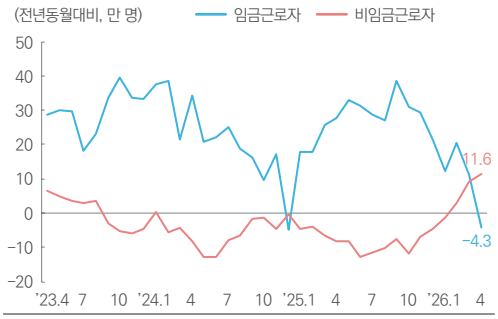
➲ 2026년 4월 임금근로자는 16개월 만에 첫 감소,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대폭 증가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3만 명 감소하여 2024년 12월 4.9만 명 감소 이후 16개월 만에 첫 감소 기록
  - 임금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20.5→(3월)11.3→(4월)-4.3

- 임금근로자 유형별로는 상용직과 일용직이 각각 6.2만 명, 2.2만 명 증가, 임시직은 12.7만 명 감소
  - 상용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15.8→(3월)14.0→(4월)6.2
  - 임시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0.8→(3월)-5.9→(4월)-12.7
  - 일용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3.9→(3월)3.2→(4월)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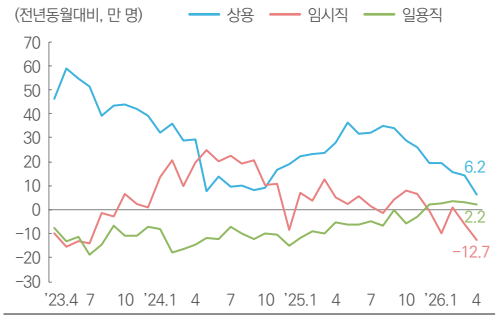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는 11.6만 명 증가하여 2022년 9월 이후 최대폭 증가
  - 비임금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2.9→(3월)9.3→(4월)11.6

그림 13 |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4 | 임금근로자 유형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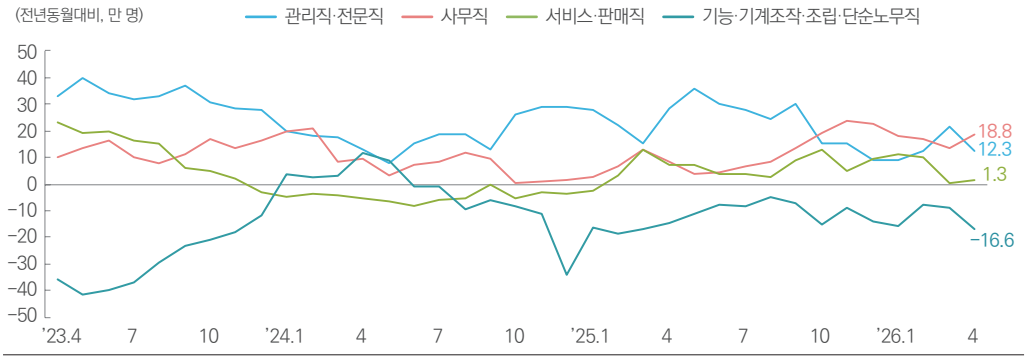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바. 직업별 취업자

➲ **2026년 4월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취업자 수는 증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은 감소**

- 관리직·전문직은 713.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3만 명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12.6→(3월)21.8→(4월)12.3
- 사무직은 532.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8만 명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16.9→(3월)13.5→(4월)18.8
- 서비스·판매직은 611.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명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10.1→(3월)0.3→(4월)1.3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은 906.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6만 명 감소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2월)-7.6→(3월)-8.9→(4월)-16.6

그림 15 | 직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CHAPTER
02 노동력 수급여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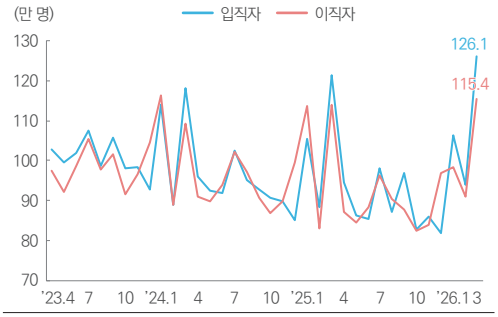
가. 입직과 이직

➲ 2026년 3월 입·이직자 수와 입·이직률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입직자는 126.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명 증가, 입직률은 6.6%로 0.2%p 상승
  - 입직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0→(2월)5.5→(3월)4.7
  - 입직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1월)0.0→(2월)0.2→(3월)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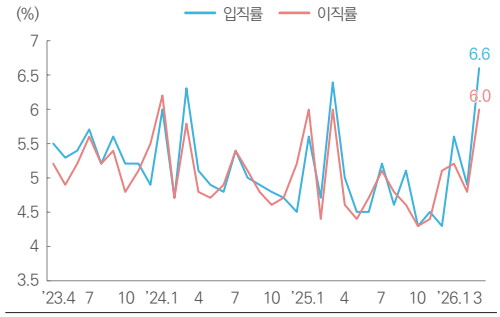
- 이직자는 115.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명 증가, 이직률은 6.0%로 동일
  - 이직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5.6→(2월)8.1→(3월)1.3
  - 이직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1월)-0.8→(2월)0.4→(3월)0.0

그림 16 | 입·이직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17 | 입·이직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나. 채용

➲ 2026년 3월 전년동월대비 채용 증가, 기타 입직자 수 감소

- 채용 인원은 113.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8만 명 증가
  - 채용 인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6→(2월)2.9→(3월)7.8

- 기타 입직자[9]는 12.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명 감소
  - 기타 입직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0.7→(2월)2.6→(3월)-3.1

[8]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2호 발간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 부문)가 모집단 변경으로 개편됨에 따라 본 절에 수록된 시계열 자료는 지난호에 수록하였던 시계열과 불일치할 수 있음

[9] 기타 입직은 본·지사간 전입, 복직 등에 의한 입직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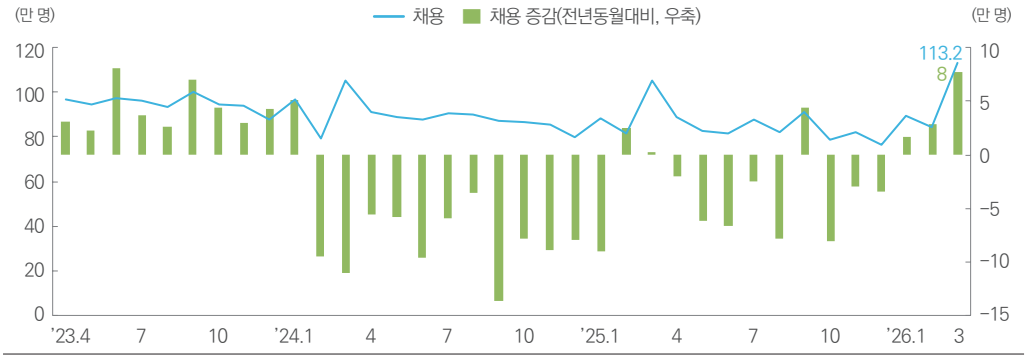
상용직 및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체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채용 증가

- (고용형태별) 상용직 채용은 51.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명 증가, 임시·일용직 채용은 61.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명 증가
  - 상용직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4→(2월)0.9→(3월)4.4
  - 임시·일용직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0.2→(2월)2.0→(3월)3.4

- (규모별) 3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인원은 71.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명 증가, 30~299인 사업체는 26.8만 명으로 2.3만 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15.3만 명으로 0.8만 명 증가
  - 30인 미만 사업체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9→(2월)2.0→(3월)4.7
  - 30~299인 사업체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2.2→(2월)1.4→(3월)2.3
  - 300인 이상 사업체 채용 증감 (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3→(2월)-0.5→(3월)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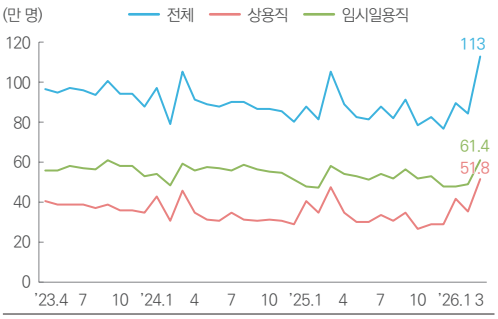
- (업종별) 건설업(2.9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만 명)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교육 서비스업(1.1만 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0.1만 명)에서 감소
  - 건설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0.8→(2월)-1.0→(3월)2.9
  -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7→(2월)0.4→(3월)1.3
  - 교육 서비스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0.5→(2월)0.4→(3월)-1.1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0.3→(2월)0.3→(3월)-0.1

그림 18 | 채용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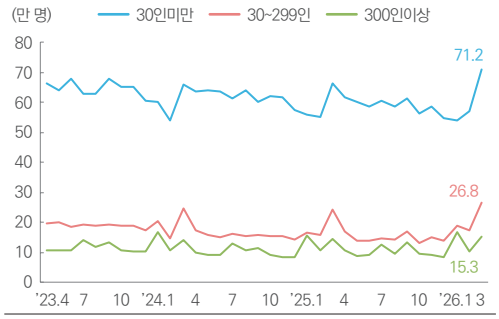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19 | 고용형태별 채용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0 | 사업체 규모별 채용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다. 비자발적 이직

➲ 2026년 3월 자발적 이직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비자발적 및 기타 이직은 감소

- 자발적 이직은 39.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명 증가, 비자발적 이직은 60.9만 명으로 0.9만 명 감소, 기타 이직은 15.4만 명으로 2.5만 명 감소[10]
  - 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4.7→(2월)3.4→(3월)4.7
  -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9.5→(2월)2.9→(3월)-0.9
  - 기타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4→(2월)1.8→(3월)-2.5

➲ 비자발적 이직은 상용직 및 30인 미만 사업체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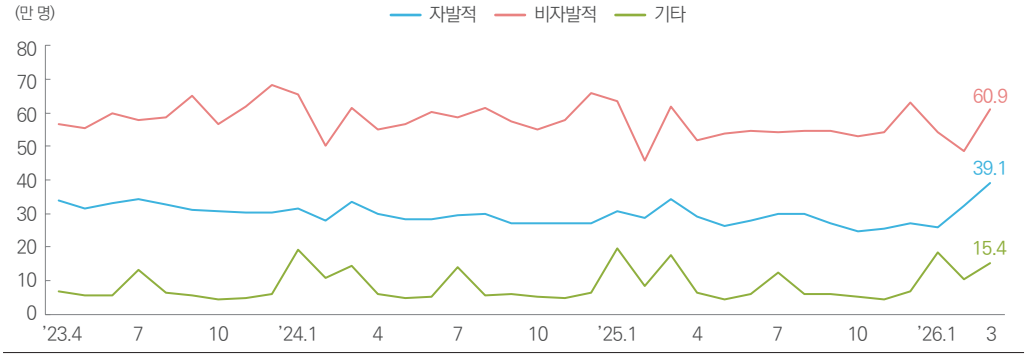
- (고용형태별) 상용직의 비자발적 이직은 15.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7만 명 감소, 임시·일용직은 45.4만 명으로 0.2만 명 감소
  - 상용직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2.5→(2월)0.2→(3월)-0.7
  -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7.0→(2월)2.7→(3월)-0.2

- (규모별)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자발적 이직은 40.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명 감소, 30~299인 사업체는 13.8만 명으로 1.5만 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6.7만 명으로 0.3만 명 감소
  - 30인 미만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7.1→(2월)0.1→(3월)-2.1

[10]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계약종료 또는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에 따른 면직 등을 의미. 기타 이직은 본·지사간 전출, 정년퇴직·사망, 병가·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에 의한 이직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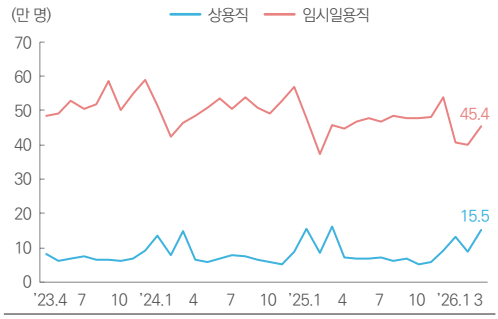
- 30~299인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1.8→(2월)2.3→(3월)1.5
- 300인 이상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1월)-0.6→(2월)0.4→(3월)-0.3

그림 21 | 사유별 이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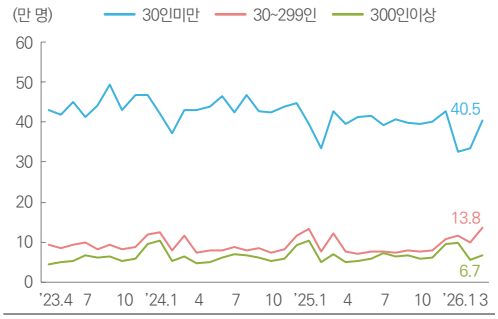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2 |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이직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3 | 사업체 규모별 비자발적 이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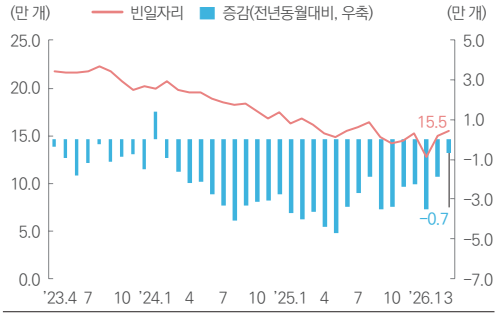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라. 빈일자리

2026년 3월 빈일자리 수와 빈일자리율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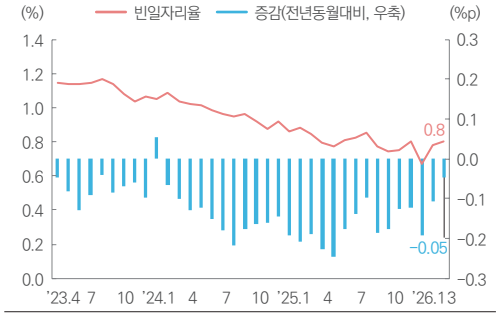
- 빈일자리 수는 15.5만 개로 전년동월대비 0.7만 개 감소, 빈일자리율은 0.8%로 전년동월대비 0.05%p 하락
  - 빈일자리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개): ('26.1월)-3.5→(2월)-1.9→(3월)-0.7
  - 빈일자리율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1월)-0.2→(2월)-0.1→(3월)-0.05
- 빈일자리 수 및 빈일자리율은 '24.1월 제외하면 2023년 1월 이후 매월 전년동월대비 하락
- (규모별) 30인 미만,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일자리율은 각각 0.9%, 1.0%, 0.2%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1%p, 0.1%p, 0.04%p 하락

그림 24 | 빈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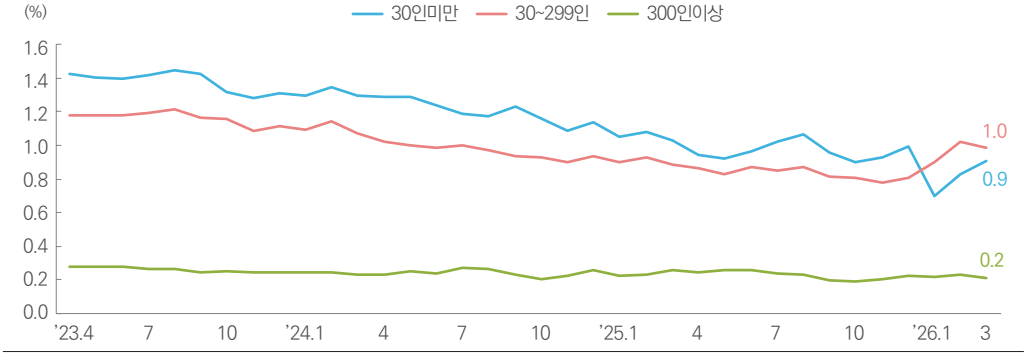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5 | 빈일자리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6 | 사업체 규모별 빈일자리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CHAPTER
03 임금 및 가구 소득

가.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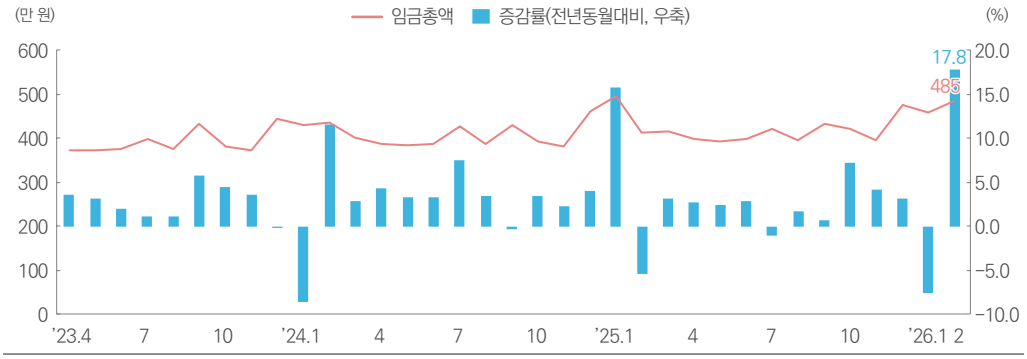
➲ 2026년 2월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7.8% 상승

-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 임금총액은 485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8% 상승
  -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3.1→('26.1월)-7.6→(2월)17.8

- 상용직 근로자 임금은 518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0% 상승, 임시·일용직은 172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 하락
  - 상용직 임금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3.1→('26.1월)-7.5→(2월)19.0
  - 임시·일용직 임금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0.7→('26.1월)3.8→(2월)-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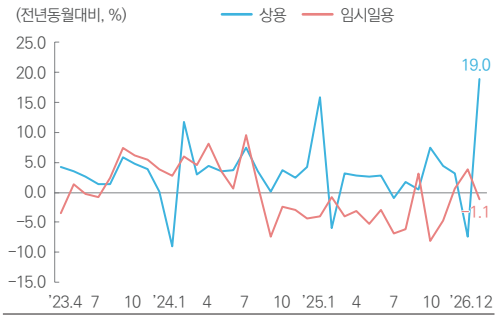
- 상용직 임금 내역별로는 2월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72.9만 원(140.7%) 증가하며 큰 폭으로 상승
  - 정액급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원): ('25.12월)10.5→('26.1월)7.4→(2월)8.5
  - 초과급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원): ('25.12월)2.2→('26.1월)0.3→(2월)1.2
  - 특별급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원): ('25.12월)2.6→('26.1월)-47.2→(2월)72.9

그림 27 |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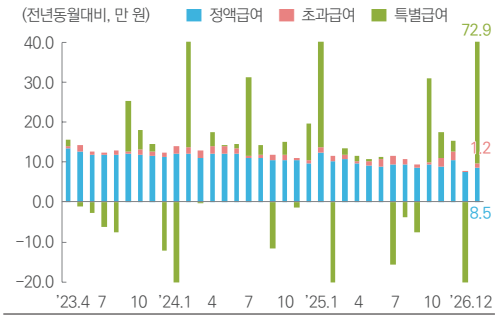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그림 28 | 고용형태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그림 29 | 상용근로자 임금 내역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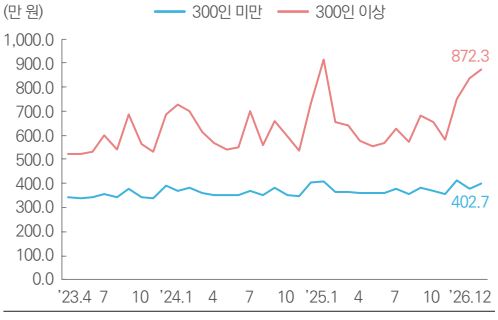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 300인 미만 사업체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1.1% 상승, 300인 이상은 33.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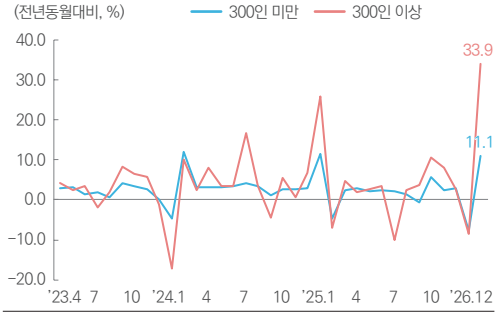
-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임금총액은 403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상승, 300인 이상 사업체는 872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9% 상승
  -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총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2.9→('26.1월)-7.7→(2월)11.1
  -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2.6→('26.1월)-8.6→(2월)33.9

그림 30 | 사업체 규모별 임금총액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그림 31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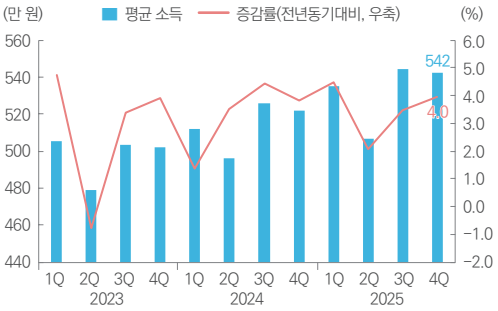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나. 가구 소득

➲ 2025년 4/4분기 가구 명목 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 명목 평균 근로소득은 3.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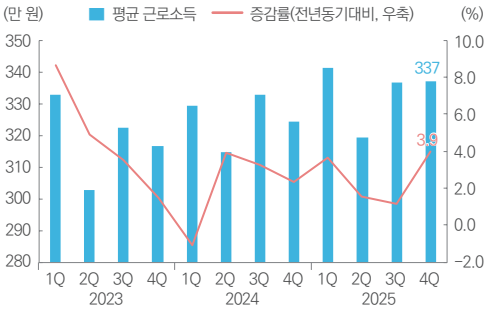
- 전체 가구의 명목 월평균 소득은 542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 (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월평균 근로소득은 337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
  - 가구 평균 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2/4분기)2.1→(3/4분기)3.5→(4/4분기)4.0
  - 가구 평균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2/4분기)1.5→(3/4분기)1.1→(4/4분기)3.9
  - 가구 평균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2/4분기)0.2→(3/4분기)0.2→(4/4분기)3.0
  - 가구 평균 재산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2/4분기)7.6→(3/4분기)-0.8→(4/4분기)-8.9
  - 가구 평균 이전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2/4분기)5.1→(3/4분기)17.7→(4/4분기)7.9

그림 32 | 가구 평균 소득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그림 33 | 가구 평균 근로소득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Box 2] 청년층 첫 일자리 및 이후 현황

➲ 청년(15~34세)들의 첫 일자리(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약 26.1개월로 나타남

-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의 평균 근속기간은 최근 3년간 감소한 반면,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 증가하며 내부적으로는 상이한 재직 패턴이 함께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약 70%는 첫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평균 근속 기간은 18.4개월로 나타남

청년(15~34세) 첫 직장 근속기간

(단위: 천명,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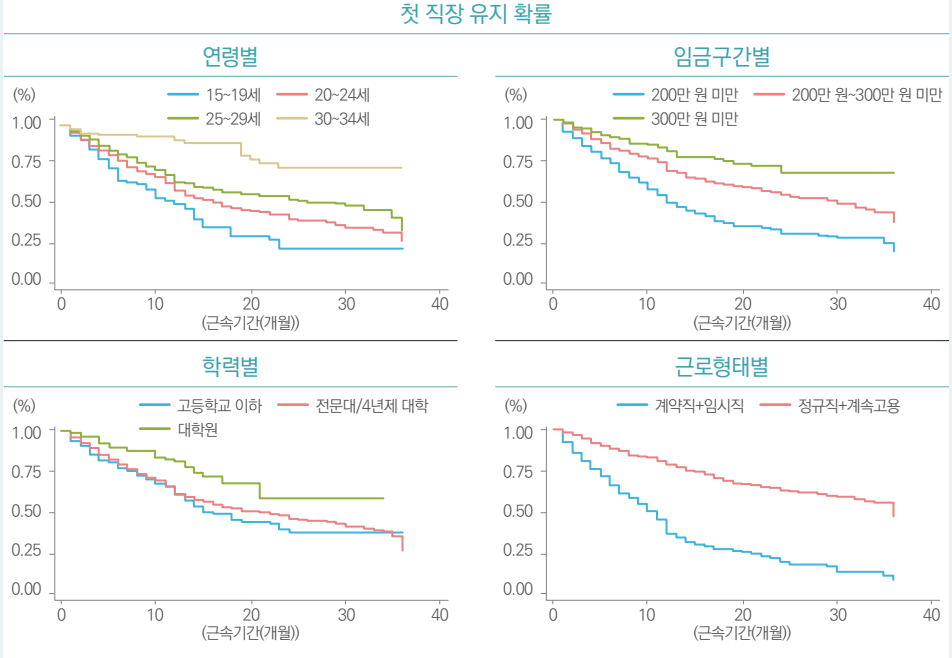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 기간		
		그만둔 경우	계속 다니는 경우		그만둔 경우	계속 다니는 경우
2023.5	6,996	5,057 (72.3)	1,939 (27.7)	25.5	19.2	42.0
2024.5	6,893	4,922 (71.4)	1,971 (28.6)	26.0	18.9	44.0
2025.5	6,816	4,817 (70.7)	1,998 (29.3)	26.1	18.4	44.7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각 연도

➲ 최근 3년(2022.5.~2025.5.) 첫 직장에 취업한 청년들의 첫 직장 유지 확률[11]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이탈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졸업과, 대학 졸업 간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남

첫 직장 유지 확률



주: 연령별은 첫 직장 입사 시점 기준 연령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첫 직장 퇴사 후 경로를 살펴보면 현재 재취업자(임금근로자) 비중은 61%로 과반을 차지하며, 현 직장까지 5개월 소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첫 직장 퇴사 후 현재 실업자는 11.4%, 비경제활동인구는 27.6%
- 다만 현재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6개월 이상 미취업기간 비중(6개월~1년미만 26.5%, 1년 이상 30%)이 높게 나타남

최근 3년 내 첫 직장 퇴사 후 경로

(단위: %)

	재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미취업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2025년 조사	61.0	11.4	27.6	43.5	26.5	3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첫 직장의 고용형태에 따라 이후 고용안정성 및 노동시장 경로에 차이가 나타남

- 취업자 중 계약직 또는 임시직 출발 청년의 34.5%는 현 직장도 계약직인 반면, 정규직 또는 계속고용 출발 청년의 현 직장이 계약직인 비중은 약 절반 수준인 18.7%
- 또한 계약직 또는 임시직 출발 청년의 현재 미취업자는 42.1%(실업자 12.3%, 비경제활동인구 29.8%)이며, 정규직 또는 계속고용의 경우에는 34.0%(실업자 9.9%, 비경제활동인구 24.1%)로 나타남

첫 직장 고용형태에 따른 현재 상태

(단위: %)

첫 직장 고용형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계약직	정규직 + 계속고용		
계약직 + 임시직	57.9	34.5	65.5	12.3	29.8
정규직 + 계속고용	66.0	18.7	81.3	9.9	24.1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위 내용은 「NABO Focus」 제157호(2026.4.30)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2025년 5월)를 활용하여 졸업/중퇴/수료 후 최근 3년(2022년 5월 이후) 첫 직장(임금근로자)에 입직한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첫 직장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까지의 기간을 Kaplan-Meier 생존함수로 재직 유지 확률을 추정하였으며 조사시점 현재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는 우측 겸열로 처리함

Ⅲ 지속가능 성장

요약

‘SDG13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국내 고온 현상과 해수면 온도상승이 심화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규모는 큰 편

- 2025년 연평균 기온은 13.7℃로 역대 2위를 기록하였고, 폭염일수(29.7일)·열대야일수(16.4일)가 각각 역대 3위·4위를 기록하는 등 고온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온열질환자는 2024년 4,460명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

- 2024년(잠정)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1.6백만tCO₂eq으로 2018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총배출량 기준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절대적 배출 규모는 여전히 큰 편임

‘SDG14 해양생태계 보존’ 부문에서 어업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어족자원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를 통한 자원 관리 강화를 추진 중

- 2025년 총어업생산량은 393만 5천톤, 생산금액은 1,023.7백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해면양식업(64.3%)이 생산을 주도함

-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2024년 63%로 회복세를 보이나, 오징어·꽃게 등 소진율이 수년째 하락하는 어종은 총허용어획량 한도를 채우지 못할 만큼 자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정부는 총허용어획량 제도 전면 확대와 어업 구조 혁신을 추진 중임

‘SDG15 육상생태계 보호’ 부문에서 보호지역 지정 비율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계정 구축을 병행 추진 중

- 한국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내 보호지역 지정 비율은 육상(40.68%)·담수(36.64%)·산악(20.21%) 전 영역에서 OECD 평균(각각 64.96%·66.62%· 61.16%)을 크게 하회하며, 2005년 이후 전 세계 평균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

- 정부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기반의 생태계 계정 구축을 위한 연구도 2025년부터 진행 중임

일러두기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미래 세대의 평화,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17개 목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므로, 'Ⅲ. 지속가능 성장'에서는 연간 지표를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구성) 13개 목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관련성이 있는 주제를 함께 묶어 지속가능 성장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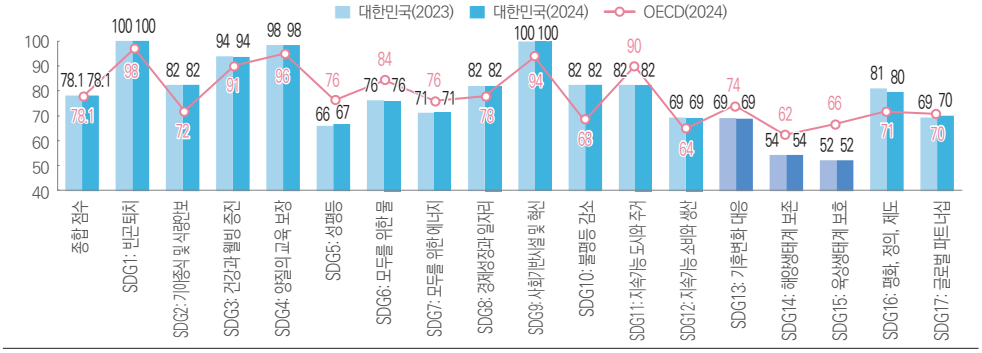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분석 SDG 목표

카테고리	SDG 종류	SDG 영역
영양·건강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3	건강과 웰빙 증진
자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호
생활	6	모두를 위한 물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9	사회기반시설·산업화 및 혁신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인적자원제도	4	양질의 교육 보장
	5	성평등
	16	평화·정의·포용적인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제6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SDG13), 해양생태계 보존(SDG14), 육상생태계 보호(SDG15) 등 기후·해양·육상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대응을 다루는 동향 지표를 수록함

- OECD 국가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세 분야에 대한 이행수준은 평균을 하회함

2024년 한국과 OECD의 SDG 분야별 점수 비교



자료: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5, (DOI 10.25546/111909)

CHAPTER
01 기후변화 대응

가. 기상 변화

2025년의 연평균 기온은 13.7℃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기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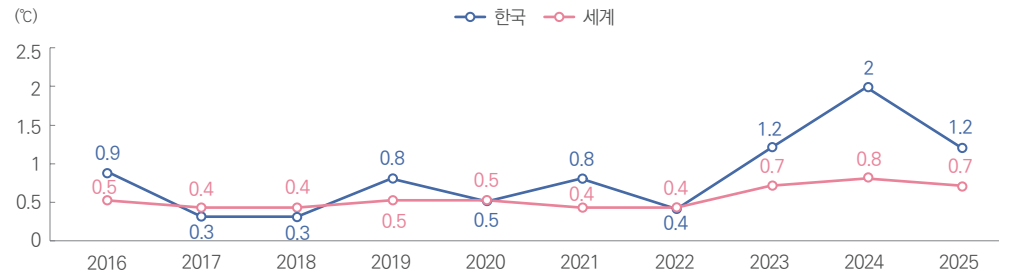
-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년 간 추이를 볼 때 2022년 12.9℃를 저점으로 2023년 13.7℃, 2024년 14.5℃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가 2025년 13.7℃로 하락
- 세계 평균 편차는 지난 10년 간 +0.4~+0.8℃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2024년 +0.8℃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 +0.7℃를 기록
- 한국은 같은 기간 +0.3~+2.0℃로 편차 폭이 넓은 편이며, 2024년에는 +2.0℃로 급등하였으며 2025년에는 +1.2℃를 기록함
- 연평균기온 순위: 1위 2024년(14.5℃), 2위 2025년(13.7℃), 3위 2023년(13.7℃)

표 1 | 연평균 기온 추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기온(℃)	13.4	12.8	12.8	13.3	13.0	13.3	12.9	13.7	14.5	13.7
평년편차[12](℃)	+0.9	+0.3	+0.3	+0.8	+0.5	+0.8	+0.4	+1.2	+2.0	+1.2

자료: 기상청, 「기상연보」 기상자료개방포털

그림 1 | 평균기온 평년 편차 추이



자료: 기상청,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12] 평년은 과거 30년간(현재 기준 1991~2020년)의 기상 요소를 평균한 값을 의미하며, 평년편차는 평년값 대비 2025년의 기상값의 차이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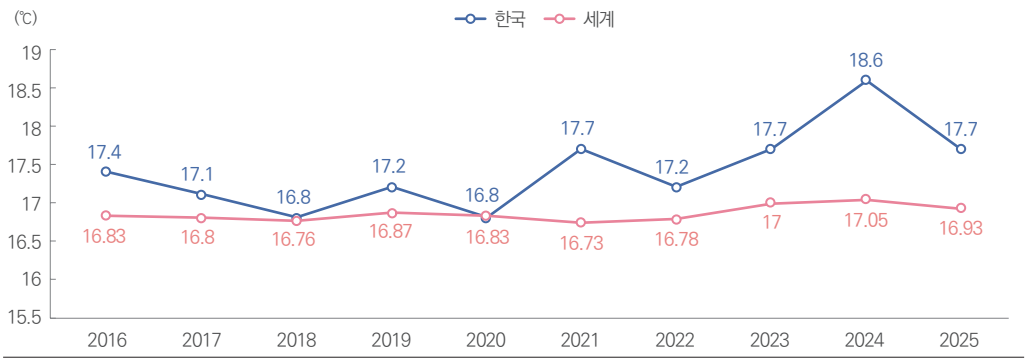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7.7℃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음

- 해수면 온도는 지난 10년 간 추이를 볼 때 2022년 17.2℃를 저점으로 2023년 17.7℃, 2024년 18.6℃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가 2025년 17.7℃로 하락

- 상반기에는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았으나, 하반기에는 최근 10년 평균을 상회
  - 가을철 해수면 온도는 26.0℃(9월), 23.3℃(10월)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5℃, 1.7℃ 높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임

- 세계 평균도 같은 흐름으로, 2023년과 2024년 사이 17.0℃에서 17.05℃로 상승한 후 2025년 16.93℃로 소폭 하락

그림 2 | 연평균 해수면 온도 추이



자료: 기상청,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표 2 | 2025년 월평균 해수면 온도 및 최근 10년 대비 편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해수면온도 (℃)	12.1	9.9	10.0	12.0	14.6	19.3	24.6	27.5	26.0	23.3	18.7	15.0
최근 10년 대비 편차(℃)	0.2	-0.4	-0.8	-0.9	-1.0	-0.3	1.3	1.1	1.5	1.7	0.8	0.6

자료: 기상청, 「2025년 연 기후특성」, 2026

폭염·열대야 등 고온 현상이 전년도에 이어 심화

- 고온 현상이 두드러져 폭염일수(29.7일)와 열대야일수(16.4일)가 각각 3위·4위를 기록하였으며 1시간강수량이 30mm를 넘겨 집중호우를 기록한 일수가 2.5일로 최고 6위
  - 폭염일수(일): 29.7, 평년 11.0, 평년차 +18.7, 역대 3위
  - 열대야일수(일): 16.4, 평년 6.6, 평년차 +9.8, 역대 4위
  - 온열질환자는 2024년 4,460명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
  - 강수량(mm): 1,325.6, 평년 1,331.7, 평년차 -6.1
  - 1시간 강수량 30mm 이상 일수(일): 2.5, 평년 1.9, 평년차 +0.6, 역대 6위
  - 일조시간(시간): 2,419.4, 평년 2,226.8, 평년차 +192.6, 역대 9위

표 3 | 2025년 주요 기상요소값

	폭염일수 (일)	열대야일수 (일)	온열질환자 (명)	강수량(mm)	1시간 강수량 30mm이상일수(일)	일조시간 (시간)
2025년	29.7	16.4	4,460	1,325.6	2.5	2,419.4
평년차	18.7	9.8	(전년대비) 20% 증가	-6.1	0.6	192.6
1973년 이래 순위	역대 3위	역대 4위	-	역대 26위	역대 6위	역대 9위

자료: 기상청, 「2025년 연 기후특성」, 2026

나. 온실가스 배출

2024년(잠정)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1.6백만tCO₂eq, 순배출량은 651.4백만tCO₂eq으로 2018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총배출량(백만tCO₂eq): ('21년)739.5→('22년)722.0→('23년)707.2→('24년)691.6(잠정)
- 순배출량(백만tCO₂eq): ('21년)700.6→('22년)684.1→('23년)667.8→('24년)651.4(잠정)

2024년(잠정) 기준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02.0tCO₂eq/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7.5% 감소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10년 동안 2018년 이후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10억 원): ('21년)343.4→('22년)326.4→('23년)314.7→('24년)302.0(잠정)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률(전년대비, %): ('21년)-0.36→('22년)-4.96→('23년)-3.58→('24년)-4.03(잠정)

그림 3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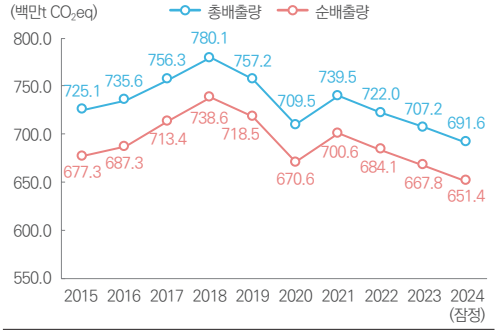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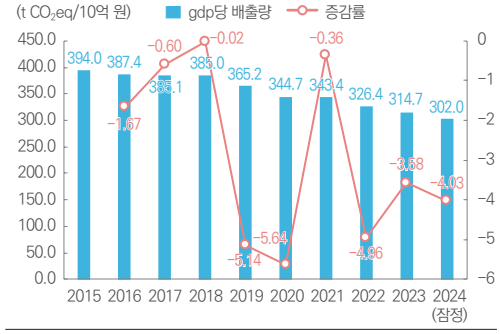


그림 4 |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감률



주1: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자료의 2015년부터 2023년은 2025년 12월 발행된 「2025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확정치를 사용하였으며 2024년 자료는 2025년 8월 발표한 통계 기준으로 추정한 잠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추후 발표될 값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

주2: [그림 3]의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2024년의 실질 국내총생산자료는 잠정치를 사용하였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4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68.2백만tCO$_2$eq로, 전세계 13위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에서 13번째
  - 주요국 온실가스 총배출량(백만tCO$_2$eq): (중국)15,536.1, (미국)5,912.6, (일본)1,063.3, (독일)674.4, (한국)668.2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2.2% 하락하였으며, 세계 13위를 기록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tCO$_2$eq/백만$): (중국)462.3, (미국)230.3, (일본)186.1, (독일)128.5, (한국)251.2

표 4 | 2024년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t CO$_2$eq, 십억$, t CO$_2$eq/백만$)

연번	국가명	온실가스 총배출량	2024년 GDP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1	중국	15,536.1	33,606.1	462.3
2	미국	5,912.6	25,675.5	230.3
3	인도	4,371.2	14,240.7	306.9
4	러시아	2,575.7	6,074.7	424.0
5	인도네시아	1,323.8	4,102.2	322.7
6	브라질	1,299.2	4,165.3	311.9
7	일본	1,063.3	5,715.0	186.1
8	이란	1,054.8	1,491.9	707.0
9	사우디아라비아	838.9	2,201.6	381.0
10	캐나다	768.1	2,340.7	328.1
11	멕시코	686.8	2,883.3	238.2
12	독일	674.4	5,247.3	128.5
13	한국	668.2	2,659.8	251.2
14	호주	591.5	1,628.2	363.3
15	베트남	584.3	1,455.8	401.3
16	튀르키예	579.5	3,018.3	192.0
17	남아프리카공화국	569.8	870.4	654.6
18	파키스탄	525.9	1,379.8	381.1

주: 국제 비교를 위해 EDGAR(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Community GHG Database 자료 기준으로 수록. 국가 공식 수치와는 데이터 출처, 방법론,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EDGAR Community GHG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Box 3]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현황 보고서 2025」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전지구 기후현황 보고서 2025」를 발간, 복수의 핵심 기후지표가 동시에 가속되고 있음을 확인 (2026.3)

기온·해양·빙하 등 주요 기후지표가 2025년에도 신기록을 경신하며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 (기온) 2025년은 176년 관측 역사상 3번째로 더운 해[13]로, 역대 가장 더운 연도 상위 11개를 2015~2025년이 모두 차지함
  - 2024년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로 파리협정 한계치(1.5℃)를 초과한 첫 해이며 2025년은 +1.43℃
  - 라니냐[14] 조건임에도 2025년은 엘니뇨[15] 없이 기록된 연도 중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
- (해양) 해양 열함량은 2025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9년 연속 신기록을 이어감
  - 해수면 상승 속도는 1993~2011년 연 2.65mm에서 2012~2025년 연 4.75mm로 빨라졌으며, 2025년 말 기준 1993년 대비 누적 상승량은 약 11cm
  - 해양 표면 pH는 41년간 연평균 −0.017씩 감소하며 해양 산성화가 지속되고 있음
- (빙하) 1950년 이후 빙하 손실이 가장 컸던 10개 연도 중 8개 연도가 2016년 이후에 집중됨
- (해빙) 2025년 북극 해빙 최대 면적은 14.19백만 km^2로 관측 역사상 최저치 기록

기후변화의 영향이 인명피해와 감염병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폭염·재난) 2025년 유럽·동아시아 폭염으로 포르투갈·스페인·튀르키예·일본·한국 등에서 역대 최고 기온이 경신됨
  - 전 세계 노동인구의 3분의 1 이상(12억 명)이 매년 직업적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음
  - 홍수·가뭄·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 기온 상승이 모기 발육과 바이러스 잠복기를 단축시켜 뎅기열 등 감염병의 전파 지역과 계절이 확대되고 있음
  - 세계 인구의 절반이 뎅기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연간 감염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13] WMO에서 사용한 9개 데이터셋 중 7개 기준. 2개 데이터셋 기준으로는 역대 2번째로 더운해로 기록됨

[14]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 이상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15] 열대 태평양 동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 이상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CHAPTER
02 해양생태계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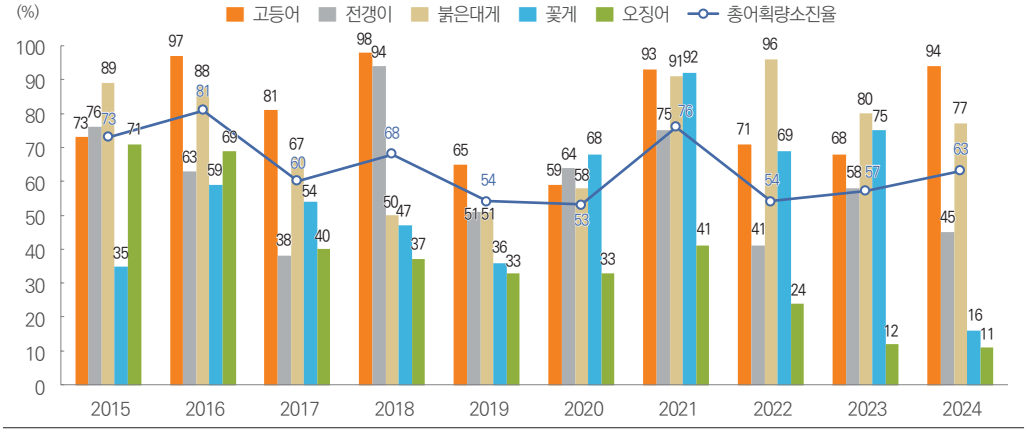
전 세계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수십 년째 하락세이며, 우리나라가 속한 북서태평양 해역도 이 추세와 흐름을 같이 함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해양생태계 보존관련 SDG 지표[16]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속한 북서태평양의 지속가능 어족자원 비율은 2021년 63.0%로 세계 평균(64.5%)과 유사한 수준이나, 2004년 90.0%에서 17년간 27%p 하락하여 세계 평균 하락폭(12%p)보다 빠른 감소 속도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세계 수치는 1974년 90%에서 2021년 64.5%로 지속 하락하고 있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는 추세임

2024년 우리나라의 총허용어획량소진율[17]은 63%로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어종 간 편차가 큰 편임

-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해양생태계 자원이 부양능력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총허용어획량소진율(%): ('21년)76→('22년)54→('23년)57→('24)63
- 어종별 소진율은 종간 편차가 크고, 고등어(2024년 94%)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반등한 반면 오징어(2024년 11%)는 5년 연속 하락하며 대조적인 추이를 보임

그림 5 | 연도별 총허용어획량소진율 및 어종별 소진율



자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TAC 어종별 소진현황」

[16]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17]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여기서 총허용어획량(TAC)은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어종별로 지정되는 연간 최대 어획량임
총허용어획량소진율 = (실제 어획량÷총허용어획량)×100

주요 어종별 TAC 소진율 패턴은 상이하며 어종에 따라 자원 감소 신호와 총허용어획량 설정 구조 문제로 나뉨

- 고등어류는 생산량과 소진율이 전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2024년 소진율 94%로 상승
- 전갱이류는 생산량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소진율은 2024년 45%까지 떨어지며 낮은 편
  - 생산량 급감 없이 소진율만 낮은 패턴은 자원 고갈보다 구조적 문제에 가까움
- 오징어는 생산량이 2021년 60,880t에서 2024년 13,568t으로 급감하였으며 소진율도 41%에서 11%로 동반 하락
- 꽃게의 생산량은 소폭 감소에 그쳤으나 소진율이 2023년 75%에서 2024년 16%로 급락
  - 2023년 호황을 반영해 2024년 총허용어획량이 높게 책정된 반면 실제 어획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임
  - 다만 꽃게류는 수온 등 환경에 따라 산란 및 성장 변동성이 큰 어종으로 낮은 소진율을 자원 감소 신호로 단정하기 어려움

그림 6 | 연근해어업 어종별 총허용어획량소진율 및 생산량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 어업생산동향조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TAC 어종별 소진현황」

➲ **소진율이 낮다는 것은 자원을 여유 있게 보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나, 오징어·꽃게처럼 소진율이 수년째 하락하는 경우는 예의주시해야 함**

- 해당 어종이 보이는 낮은 소진율은 어업인이 조업을 자제한 결과 혹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을 만큼 실제 자원 자체가 줄어 총허용어획량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정부는 자원 위기 대응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 확대와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
  -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체계 확대
  - 인공지능 기반 기후변화대응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분포 변동사항을 반영한 기후적응형 회복모델 개발
  - 기후지표를 반영한 기후적응형 서식지 복원기술 개발

CHAPTER
03 육상생태계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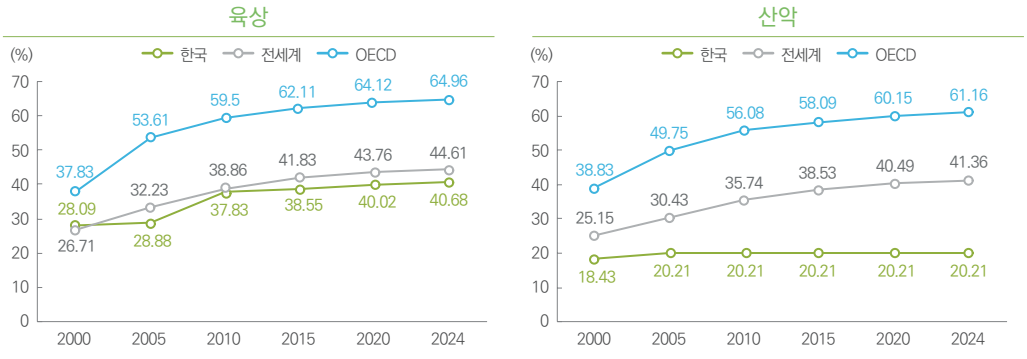
한국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Key Biodiversity Areas) 내 보호지역 지정 비율은 육상·산악 전 영역에서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육상 지역의 경우 2024년 기준 한국의 보호지정비율은 40.68%로 전 세계 평균 44.61% 및 OECD 평균 64.96%보다 모두 낮으며, 2000년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던 것과 대조적으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남

- 산악 지역의 보호지역 비율은 2024년 기준 20.21%로 전 세계 평균 41.36% 및 OECD 평균 61.16%와의 격차가 가장 큰 영역으로 나타남

정부는 2030년까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에 따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 확대를 추진 중임

그림 7 |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중 보호지역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한국은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경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음

- 환경경제통합계정은 2012년 유엔에서 공식 채택한 계정 체계로, 2024년 기준 설문에 응답한 120개국 중 94개국이 부분적으로 이행 중
  - 이는 2014년 기준 이행국이 54개국에 불과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10년 간 큰 진전을 보임
  - 중앙체계 내 이행률은 에너지 계정이 72%로 가장 높고, 환경보호·자원관리 지출, 대기배출, 물질흐름 순이며 폐기물 계정이 가장 낮음

- 생태계 계정은 규모 계정 이행률이 45%로 가장 높은 반면, 자산 계정·서비스 화폐 계정은 각각 11%, 18%로 낮은 이행 수준에 그침

• **한국은 환경보호지출계정과 환경관련 조세 및 세입 계정을 각각 2009년, 2023년부터 이행 중이며 물 계정과 생태계 계정은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임**

표 5 | 국가별 환경경제통합계정 이행 현황, 2024

구분	계정	국가 수(이행 국가 중 비율)	한국의 이행 현황
중앙체계	에너지 계정	68(72%)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지출 계정	55(59%)	이행
	대기배출 계정	53(56%)	
	물질흐름 계정 및 경제 전체 물질흐름 계정	50(53%)	
	환경 조세 및 보조금 계정	46(49%)	이행
	환경 상품 및 서비스 계정	43(46%)	이행 준비
	물 계정	37(39%)	이행 준비
	농림수산업 계정	37(39%)	
	토지 계정	36(38%)	
	폐기물 계정	20(21%)	
생태계 계정	규모 계정	42(45%)	생태계 계정 전체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 중
	서비스흐름 계정(물리)	27(29%)	
	상태 계정	26(28%)	
	서비스흐름 계정(화폐)	17(18%)	
	자산 계정(화폐)	10(11%)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Box 4]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6년 3월 국가데이터연구원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을 발간

(한국의 이행상황) 지난 10년간 보건, 정보화, 공공 안전 및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지표에서 여전히 도전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람(People): 보건·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수준은 높으나, 취약계층 빈곤과 실질적 평등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
  - 여성의 사회진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돌봄과 가사노동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
  -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다시 상승하였으며,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성인 문해력과 수리력이 10년 전보다 크게 하락하여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나타남
- 지구(Planet): 인프라 보급은 우수하나, 생태계 보호와 재난 대응력에서 보완이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감소세지만, 기후위기 심화로 폭염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최근 오히려 증가
  - 재생에너지 비중은 9%를 넘어서며 성장 중이나,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 개선세는 최근 정체
- 번영(Prosperity): 불평등 구조 심화와 고용 변화에 주목할 필요
  -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이 성장하고 있으나, 지출 구조상 소득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뚜렷
  - 총고용 대비 제조업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평화와 협력(Peace and Partnership): 포용적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확대의 성과 및 한계
  - 부패나 차별 경험은 줄었으나, 여성 및 저학력·저소득층의 정치 효능감이 낮게 나타남
  - ODA 규모가 GNI 대비 0.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32개국 중 25위 수준

(글로벌 이행상황) 2030년 달성 시한을 5년 앞둔 현재 전체 세부 목표 중 단 18%만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

- 17%는 완만한 진전, 48%는 진전이 미흡하거나 정체, 18%의 세부목표는 오히려 2015년 기준선보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심화 등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정기적으로 국가 데이터가 제공되는 지표의 비율이 2025년 74%로 2016년(36%)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글로벌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가 완전히 정립
  - 2026년 1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이 발효되는 등 국제사회의 연대와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틀은 확고하게 구축되고 있음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Ⅳ

AI 기술 발전과 노동

"기술 동향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Ⅳ 기술 동향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자동화, 로봇 및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은 산업 구조와 생산 방식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 변화는 직무 구성과 숙련 수요, 고용 형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두됨.
이에 대응하여 'Ⅳ. 기술동향'에서는 향후 고용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기술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해당 기술의 발전 단계와 활용 방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조기경보(Early Signal)'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보고서의 특징

- (핵심 기술 동향) 자동화, 서비스 로봇, 생성형 AI 등 고용 환경 변화와 관련있는 주요 기술의 발전 단계와 산업별 도입 현황 소개
- (정량·정성 통계) 국제 비교 통계, 기술·산업 관련 기초 지표와 함께 전문가 견해 및 주요 사례를 제시하여 기술 발전의 현 주소를 이해하는 동향 정보를 제공
- (기회와 위험의 균형)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논의보다는, 기존 직무의 성격 변화와 새로운 직무의 생성 가능성을 포함하여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균형 있게 제시

향후 기대효과

- '기술동향'은 중·장기 고용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의 등장을 점검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연간 '기술동향' 주제

제5호(2월)	제6호(5월)	제7호(8월)	제8호(11월)
로봇	AI	자동화	자율주행

※「기술동향」기획·자문: 허은녕 교수
(자원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공학전문대학원)

AI 기술 발전과 노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 **이정혜** 교수

01 AI 발전 상황

➲ 생성형 AI는 범용 업무 도구로 확산되며 기업의 업무 흐름 전반에 통합되고 있음

- 생성형 AI는 결과물 생성 능력을 기반으로 기존 AI 대비 활용 범위를 크게 확대함
  - 텍스트·이미지·오디오·코드 등 다양한 결과물을 직접 생성하여 업무에 즉시 연결 가능

- 생성형 AI는 개별 서비스에서 기업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 ChatGPT 공개 이후 대중화되었으며, 현재는 검색, 문서 작성, 개발, 고객지원, 조사·분석 등에 내장되는 형태로 발전

- AI는 시범 도입을 넘어 범용 인프라로 정착하는 단계에 진입함
  - Stanford AI Index[18] 2026에 따르면 조직 차원의 AI 도입률은 88% 수준

도입 사례 ① 전사적 생성형 AI 통합	
KB라이프	Microsoft 365 Copilot을 전 직원 대상으로 도입하여 문서 요약, 회의록 작성, 일정 관리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 변화 관리 교육과 맞춤형 에이전트 개발을 통해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SK이노베이션	Azure OpenAI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을 정유, 석유화학 업무에 적용. 엔지니어링 자료 검색, 분석, 데이터 처리, 보고서 작성 등 시간 소요가 크던 작업을 효율화하고 Power Automate, Teams와 연계해 지능형 워크플로우 구현

➲ 멀티모달 AI는 정보 처리에서 실제 업무 수행과 상호작용 중심으로 발전

- 멀티모달(multimodal)은 여러 형태(modality)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함
  -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이 통합적으로 인식·이해·생성하는 것
  - Gemini 2.5는 추론·코딩 강화와 함께 음성 생성 및 컴퓨터 작업 수행 기능 포함

- AI가 문서 기반 업무 보조를 넘어 회의 지원, 실시간 통역, 화면·영상 분석, 음성 인터페이스, 고객 상담 자동화와 같은 복합 업무에 적용될 수 있음

[18] 미국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I가 매년 발간하는 인공지능 분야 종합 분석 보고서이다.

도입 사례 ② 멀티모달 AI를 활용한 고객 접점 혁신	
LG유플러스 '익시오(ixi-O)'	Google Gemini를 도입한 AI 통화 에이전트로, 통화 맥락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음성·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통화 내용 요약 및 추천 행동을 제안
아모레퍼시픽 'AI 뷰티 카운슬러(AIBC)'	Azure OpenAI 기반의 개인화 뷰티 상담 에이전트로, 역할별 특화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에이전틱 AI 아키텍처를 구축.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AI는 생성 중심에서 추론 및 에이전트 기반 작업 수행 중심으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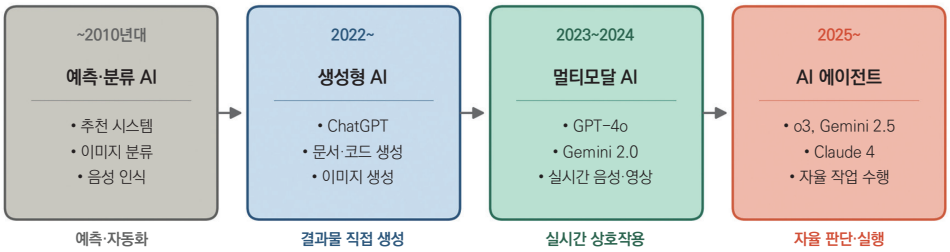
- AI 에이전트(AI agent)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를 넘어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행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
  - 기존의 AI가 질문에 대답만 하는 수동적 챗봇 역할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받고 여러 단계의 작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게 됨[19]

- 주요 기업들은 에이전트형 AI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OpenAI, Google, Anthropic은 공통적으로 도구 활용·장시간 작업 수행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

- AI는 업무 수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검색, 검증, 실행, 후속 작업까지 연결 수행하며 업무 절차 일부를 직접 담당

도입 사례 ③ AI 에이전트의 산업 현장 적용	
LG전자 HS본부 'CHATDA'	Azure Open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AI 플랫폼. 정기 회의 보고서 에이전트, 환경 법규 검토 에이전트 등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운영하며 글로벌 수천만 대 가전제품 데이터를 통합 분석
한화큐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허가 문서 분석, 에너지 절감 효과 예측, 그리드 서비스 수익 예측 등에 AI 에이전트를 활용. 시장 출시 속도가 30% 이상 향상되고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그리드 안정성 강화 등 실질적 성과 달성

그림 1 | AI 기술 발전의 4단계 흐름



[19] 출장 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AI는 단순히 일정 추천에 그치는 반면, AI 에이전트는 항공권 검색, 호텔 예약, 일정표 등록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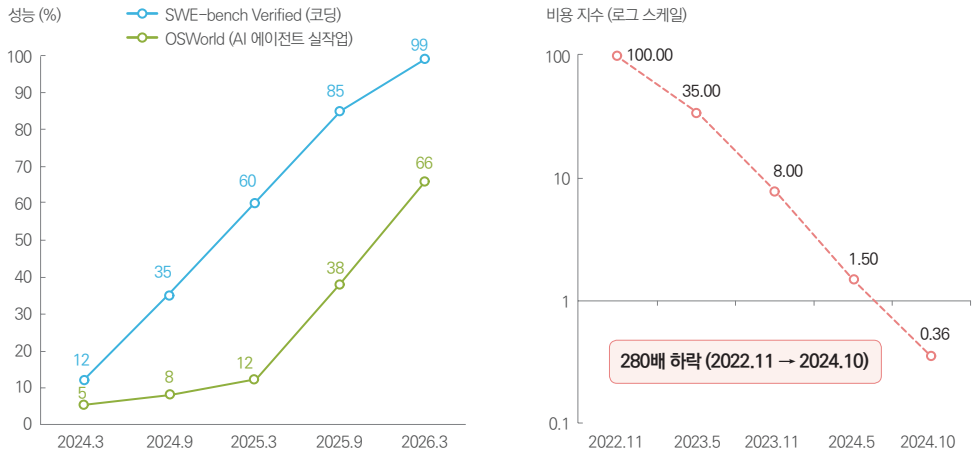
AI 성능 향상과 비용 하락은 산업 확산과 경쟁 구조 변화를 동시에 초래

- AI 모델 성능은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개선
  - Stanford AI Index 2026에 따르면 언어·추론·코딩·수학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일부는 인간 수준 도달

- 비용 하락은 AI 확산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 동일 성능을 구현하는 추론 비용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280배 하락

- 경쟁 구조는 소수 선도기업 중심에서 다수 경쟁 체제로 변화
  - 프런티어 모델 간 성능 격차 축소로 기업 간 경쟁 심화

그림 2 | AI 성능 향상과 추론 비용 하락 추이



자료 : Stanford AI Index 2025-2026

AI 확산은 투자 확대와 산업계 중심의 기술 주도 구조로 변화

- 글로벌 AI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며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음
  - 2025년 전 세계 기업의 AI 관련 투자 규모는 5,8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민간 투자는 3,447억 달러로 전년대비 127.5% 증가

- 오늘날 AI 기술 개발의 중심은 학계에서 산업계로 이동
  - 주요 프런티어 모델 대부분이 산업계에서 개발되어 출시
  - 기술 경쟁의 초점도 연구 성과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 배포와 생태계 경쟁으로 이동

표 1 | 2025년 글로벌 AI 투자 및 도입 현황

지표	2025년 수치	전년 대비 / 비교
전 세계 기업 AI 투자	5,817억 달러	+130% (전년 대비)
글로벌 민간 AI 투자	3,447억 달러	+127.5% (전년 대비)
미국 민간 AI 투자	2,859억 달러	중국(124억 달러) 대비 23배
조직 차원 AI 도입률	0.88	PC, 인터넷보다 빠른 보급
AI 에이전트 실제 활용률	한 자릿수	대부분 사업 기능에서 초기 단계

자료 : Stanford AI Index 2026

AI는 디지털화를 넘어 업무 구조와 노동 과정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음

- AI는 단순한 전산화를 넘어 업무 중간 과정을 압축하는 동시에 실행단계에까지 확장되고 있음
  - 초안 작성, 정보 탐색, 요약, 구조화 등 인지적 준비 작업 자동화
  - 검색, 검증, 코드 실행, 도구 호출, 후속 작업 수행까지 연결

- 노동시장 영향은 직업 단위가 아닌 과업 구조 변화 중심으로 나타남
  - 작업 순서와 책임 분담 재편이 주요 변화로 작용

AI는 기술을 넘어 거버넌스와 제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AI 규제와 제도 도입이 진행 중
  - 유럽연합은 AI Act를 2024년 8월 발효하여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

- 우리나라도 2026년 1월 AI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AI 활용 사실 고지와 AI 결과물에 대한 설명 가능성 확보 등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향후 AI 기술은 ① 자율성 확대, ② 멀티 에이전트 협업, ③ 과학적 발견 영역으로 확장될 전망

- (자율성 확대) AI는 보조 도구를 넘어 업무 의사결정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 이동
  - Gartner는 2026년 말까지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40%에 작업 특화 AI 에이전트가 내장될 것으로 전망(2025년 5% 미만에서 급증)하며, 2028년까지 일상적 업무 의사결정의 약 15%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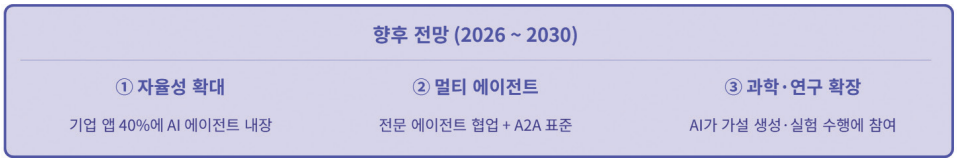
- (멀티 에이전트) 단일 모델이 아닌 여러 전문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구조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
  - 기존 챗봇이 단일 에이전트로 응답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영업, 법무, 운영 등 영역별 전문 에이전트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복합 업무를 분담 수행하는 구조로 진화
  - Gartner는 2027년까지 에이전트형 AI 도입의 1/3 이상이 멀티 에이전트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Salesforce, Google Cloud는 에이전트 간 통신 표준인 'Agent2Agent(A2A) 프로토콜'을 공동

개발하여 서로 다른 플랫폼의 AI 에이전트가 상호 운용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추진

- **(과학, 연구 영역 확장) AI가 단순 정보 처리를 넘어 가설 생성과 실험 수행에 능동적으로 참여**
  - Microsoft Research는 2026년부터 AI가 논문 요약 수준을 넘어 물리, 화학, 생물학 분야에서 직접 가설을 생성하고 실험 도구를 제어하며 인간 연구자와 협업하는 'AI 연구 동료(AI lab assistant)'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동시에 소형 언어모델(small language model)이 특정 도메인 특화 영역에서 비용 효율적 대안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모델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 공공기관도 자체 AI 도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자율성 확대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 과제도 동반**
  - Gartner는 2027년까지 에이전트형 AI 프로젝트의 40% 이상이 비용 부담, 명확한 가치 입증 미흡, 거버넌스 취약 등의 문제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이에 대응하여 다른 AI 에이전트의 행동을 감시, 통제하는 '가디언 에이전트(guardian agent)'가 새로운 카테고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전 자율성의 경계(bounded autonomy) 설정 능력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

그림 3 | AI 기술 발전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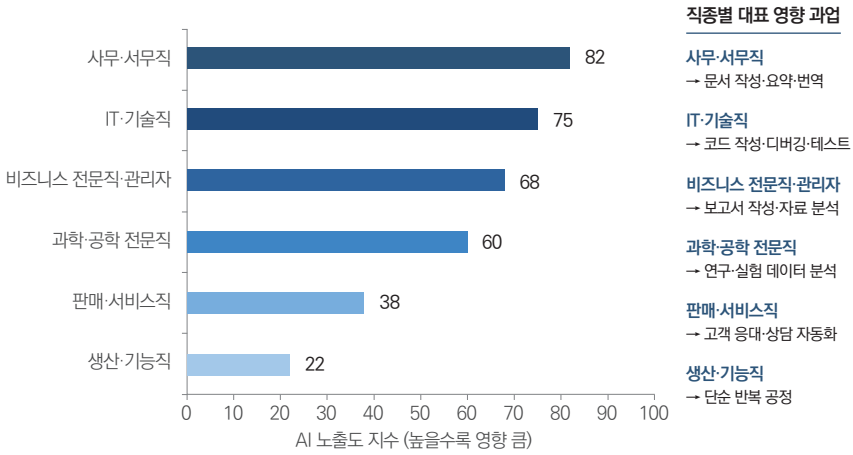
자료 : Stanford AI Index 2026, Gartner, Microsoft Research

02 AI 기술과 노동시장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대체보다 직무 재구성과 과업 변화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성형 AI는 노동자 상당수가 종사하는 직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완전 자동화보다는 과업 단위 변화가 핵심
  - 직업 자체의 소멸보다는 직무 내부 과업의 재배치 및 협업 방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발생
- 특히 사무·서무직을 중심으로 노출도가 높으며, 전문직·기술직으로도 빠르게 확산
  - 디지털화가 진전된 직무일수록 AI 적용 가능성이 높은 특징

그림 4 | 직종별 AI 노출도와 대표 영향 과업



주 : AI 노출도 지수는 직무별 주요 업무의 자동화, 보조 가능성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대적 지표이며, 수치는 재구성된 추정치임.
자료 : OECD·한국노동연구원(2025) 기반 재구성

AI의 영향은 육체노동보다 화이트칼라 직종의 인지적 과업 구조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OECD·한국노동연구원(2025)[20]은 AI가 정형적·반복적 과업보다 판단과 해석이 요구되는 비정형 인지 과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 IT, 경영, 연구·기술직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
- 과거 자동화가 저숙련 반복 업무 중심이었다면, 최근 AI는 중간숙련 이상 인지 노동의 재설계를 중심으로 전개

[20] OECD·Korea Labor Institute(2025),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r Market in Korea". OECD

• 생성형 AI와 에이전트형 AI의 확산은 중간 숙련 사무직과 진입 단계 일자리 구조에 변화를 초래
  - 생성형 AI는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번역, 요약, 기초 코딩 등 신입·주니어 인력의 핵심 과업을 빠르게 대체·보완

• AI 확산의 핵심 영향은 일자리 감소보다 숙련 형성 및 조직 학습 구조의 변화에 있음
  - 직업의 급격한 소멸보다는 입문 단계 업무와 자동화 대상 과업 간 재구성이 우선적으로 발생
  - 기존의 경력 형성 경로(주니어 → 숙련)의 약화 또는 변화 가능성 존재

➲ 현재까지 AI 도입이 고용 총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이용되면 고용의 변화가 본격화 될 수 있음

• OECD·한국노동연구원(2025)에서 한국 기업의 다수는 AI 도입 이후 인력 규모 변화가 없다고 응답
  - 2024년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AI 도입 이후 95.5% 기업이 부서나 팀 차원의 인력 변화는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과업의 변화가 있던 경우에도 부분 대체가 56.6%이며, 전면 교체는 8.4%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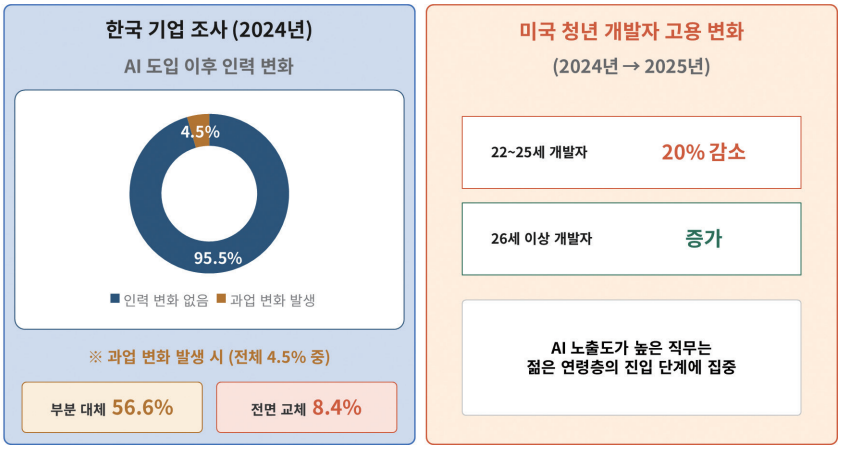
• 맥킨지(2025)[21]의 조사에서는 43% 기업이 AI로 인한 고용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했지만, 32% 기업은 고용을 줄일 것으로 응답함
  - 13% 기업은 향후 고용을 늘릴 것으로 응답함

• Stanford AI Index 2026에 따르면,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는 젊은 연령층이 수행하는 과업에 집중되어 있음
  - 미국의 22~25세 개발자 고용은 2024년 이후 약 20% 감소한 반면, 연령이 높은 개발자의 고용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산업 현장에서 AI 에이전트 이용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으나, AI 에이전트의 활용이 확대되면 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수 있음

[21] McKinsey (2025), "The state of AI in 2025: Agents,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그림 5 | AI 도입 이후 기업의 인력 변화 응답 분포



자료 : OECD·한국노동연구원(2025), Stanford AI Index 2026

➲ AI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AI의 확산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전 세계 일자리의 22%가 AI로 인해 재편될 것으로 예상
  - 1억 7천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9천 2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 일자리의 재편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새로운 노동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리스크를 동반
  - OECD·한국노동연구원(2025)은 AI 도입으로 기업의 업무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
  -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에 있어 AI 도입 방식, 업무 재설계, 교육훈련 등을 노동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03 시사점

AI 확산 대응은 '도입 속도'보다 '노동 재설계' 중심으로 전환 필요

- AI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총량보다 직무 내부 과업과 숙련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영향
  - 대규모 해고보다 채용 축소, 진입 단계 직무 재설계, 화이트칼라 과업의 부분 자동화가 선행
  - 생성형·추론형·에이전트형 AI는 입문 단계 과업과 중간 과정 업무를 빠르게 압축
  - 숙련 축적 경로 변화 및 조직 내 학습 구조 약화 가능성 존재

- 노동시장 영향은 실업보다 '진입 경로 변화'에서 먼저 가시화
  - 청년층 및 채용 단계 중심으로 AI의 영향이 집중되는 경향
  - 입문 직무 축소 및 경력 형성 구조 재편 가능성 확대

생산성·분배·교육 정책의 통합적 대응 필요

- AI 도입의 편익과 비용이 계층 간 불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
  - 고숙련·고소득층에 편익 집중, 취약계층에 전환 비용 전가 우려
  -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층, 중간 숙련 사무직, 여성·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재교육 체계는 'AI 활용'에서 '직무 전환' 중심으로 전환 필요
  - 기술 역량(AI·빅데이터 등)과 함께 창의성, 회복탄력성, 협업 등의 역량 중요성 확대
  - 사무직: 문서 검증, 프롬프트 설계, 정보 신뢰성 판단 능력 중요
  - 전문직: AI 산출물 검수 및 책임 판단 역량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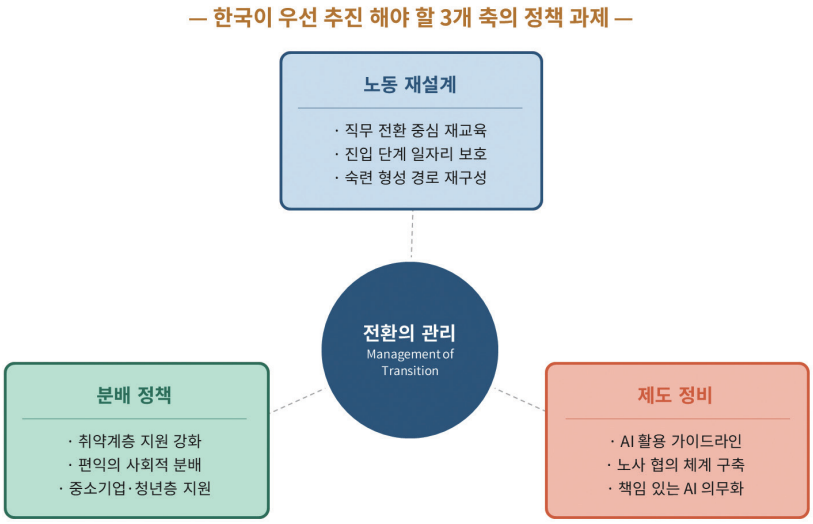
한국의 과제는 'AI 도입 체계와 전환 관리 역량' 구축에 있음

- AI 도입 수준 및 제도적 기반은 아직 제한적
  - 기업 전반 및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기업 내부 가이드라인 및 직장 내 활용 규범도 미흡

- 에이전트형 AI는 아직 초기 단계로, 선제적 제도 정비 필요
  - 조직 차원의 AI 도입은 확대되었으나 실제 활용은 제한적 수준
  - 과도한 낙관·비관을 경계하고 채용 구조, 직무 설계, 재교육, 노사 협의 체계 선제 구축 필요

- 핵심 쟁점은 기술 자체보다 '전환의 관리와 분배'
  - AI는 일자리 대체 기술이 아니라 노동 구조와 숙련 가치를 재구성하는 범용 기술
  - 생산성 향상과 전환 비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정책의 핵심 과제

그림 6 | AI 시대 노동 정책 대응 프레임워크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V

최근 북한경제의 반등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검토

"이슈 분석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V

이슈 분석

최근 북한경제의 반등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검토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한승룡** 경제분석관(02-6788-4752)

01 검토 배경

2026년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개최를 계기로 북한 경제는 새로운 5개년계획(2026~2030)에 진입

- 북한은 이전 5개년계획(2021~2025)의 "성과적 완결"을 자평하며, 2035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이행을 선언
  - 2023~2024년 한국은행 추계 기준 2년 연속 3%대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팬데믹 기간의 급격한 위축에서 벗어나는 양상
  - 2026년 국가예산 지출은 전년대비 5.8% 증가로 편성되어, 긍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시

- 다만 최근의 성장세가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며, 환율·물가 불안 등 잠재 리스크도 병존
  - 시장 환율과 물가 흐름은 공식 성장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제 안정성과 주민 체감경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

단기 경기 반등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

- 단기적인 경기 반등은 교역 회복과 대외협력 확대에 힘입어 나타날 수 있지만, 성장의 지속 가능성은 노동공급과 인구구조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
  - 출산율 저하, 인구 정체, 연령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과 내수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

- 특히,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노동공급 제약이 중장기 성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최근 북한의 경제·인구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그간 통일비용, 북한 인프라 개발, 남북 경제협력 등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음[22]
  -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최근 북한의 경제·인구 현황, 성장 지속가능성, 통계 투명성 논의로 확장하여 검토

- 최근 북한의 경제 및 인구 현황을 토대로 단기 경기 회복의 성격과 취약성을 점검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나아가 노동투입 기반 성장의 한계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본축적과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으로서 통계 투명성과 데이터 개방의 의미를 비교 사례를 통해 검토

[22] 국회예산정책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2014; 국회예산정책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2019. 외 다수.

02 최근 북한 경제의 반등과 한계

가. 거시 지표와 부문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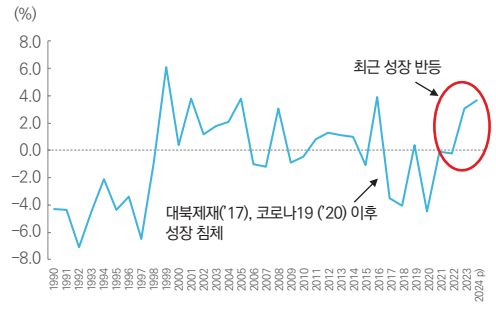
➲ 최근 북한경제는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임

- 2023~2026년 북한경제는 제한적이나마 플러스 성장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2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이후 '23년 3.1%, '24년 3.7%로 2년 연속 3%대 성장하였고,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기저효과와 함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생산 활동이 성장세를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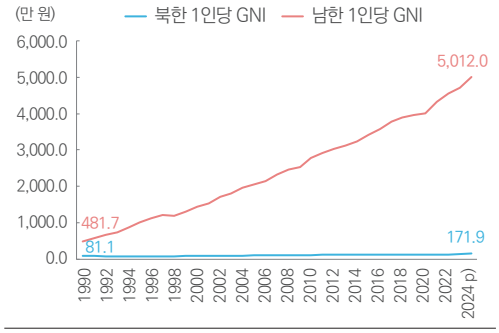
- 다만, 북한경제의 절대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은 단계로 추정됨
  - 2024년 기준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71.9만원이며 UN 통계기준 678달러로, 남한 대비 3.4% 수준임
  - 시장 환율 변동이 클 경우 달러기준 실질 구매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음

그림 1 | 북한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NI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1990~2024)



남북한 1인당 GNI 비교(1990~2024)



주: p)는 잠정치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 부문별 성장세는 중화학공업과 건설업에 집중되어 주민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을 가능성

- 군수·건설 관련 부문 중심으로 성장하여 '24년 중화학공업은 전년대비 10.7%, 건설업은 1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공업 부문의 경우 '24년에 전년대비 -0.7% 성장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문에서 경제성장은 제한적임

[23] 강성현·이해정, "2025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시사점", 경제주평 26-02호, 현대경제연구원, 2026.

표 1 |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전년대비, %))

	'20	'21	'22	'23	'24
경제성장률	-4.5	-0.1	-0.2	3.1	3.7
농림어업	-7.6	6.2	-2.1	1.0	-1.9
광업	-9.6	-11.7	4.6	2.6	8.8
경공업	-7.5	2.6	5.0	0.8	-0.7
중화학공업	-1.6	-3.7	-9.5	8.1	10.7
전기·가스·수도업	1.6	6.0	3.5	-4.7	0.9
건설업	1.3	1.8	2.2	8.2	12.3
서비스업	-4.0	-0.4	1.0	1.7	1.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나. 대외무역과 시장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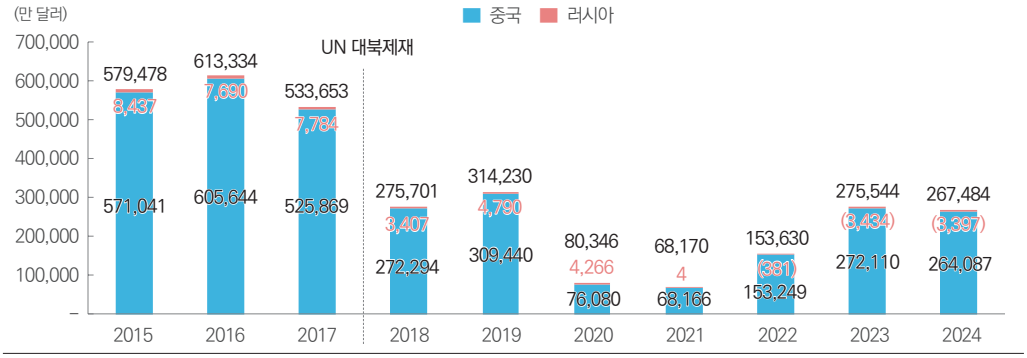
➲ 단기 반등에는 2023년 이후 대중 교역 회복과 북러 경제·안보 협력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중국과의 교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며 회복 흐름을 보임
  - 2025년 대중 교역액은 27.3억 달러로 전년대비 25.5%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7.9억 달러)의 98.1% 수준까지 회복
  - 2025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계기로 6년만의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10월에는 리창 총리가, 금년 5월에는 왕이 부장이 방북하는 등 북중 교류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

- 러시아와의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가 최근 경제동향의 주요 변수로 부각
  -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는 중국과의 협력 기반 위에 러시아와의 안보·군사 협력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북러 교역규모는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던 2023년 약 3,44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9배 증가하였고, 동 기간 러시아발 석유 공급도 제재 상한인 50만 배럴을 크게 상회하는 120만 배럴 수준으로 추정[24]
  - 다만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미미한 수준

[24] 이종규 외, "2024/2025 The DPRK Economic Outlook", KDI, 2025.

그림 2 | 북한 대중·대러 교역 규모



주: 러시아는 전쟁으로 2022년부터 공식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KDI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재구성(괄호 안)
자료: KOTRA; 김규철·남진욱,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KDI, 2025.

➲ 시장 환율(장마당 기준)이 이례적인 속도로 급등하는 것은 반등의 취약성을 보여줌

- 시장가격과 환율의 변동은 북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
  - 북한원/달러 환율: ('20년대 초)8,000원→('24년 하반기)20,000원→('26년 4월)70,000원
  - 북한원/위안 환율: ('23년 12월)1,243원→('25년 12월)5,000원→('26년 4월)8,000원

- 공식 GDP 성장률은 거시경제의 회복을 보여주는 반면, 식량·생필품 가격 상승이 보고됨
  - 1kg당 쌀 가격은 2024년 5,000원 수준에서, 2025년 6월 12,000원, 2025년 9월 26,000원으로 급등하여 현재는 30,000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
  - 2025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은 농촌진흥청 추정 490만톤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작황은 소폭 개선되었으나[25], 시장 쌀 가격이 급등한 것은 가격 상승의 주요인이 환율과 유통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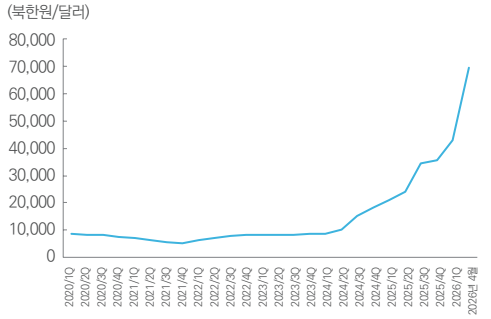
-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식량 감소[26], 주요 국영 기업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국가 유통망 통제 등으로 인해 2024년 이후 북한 장마당 물가 급증세[27]

[25] 농촌진흥청, "올해 북한 식량작물 490만톤 생산, 전년대비 12만톤 증가", 보도자료, 2025.12.23.

[26] 2019년 16.2만톤→2025년 약 1.8만톤 (89% 감소). 다만 수입식량 감소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도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김영훈, "2025/26년 북한의 식량·농업 주요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호, KDI, 2026, pp.77-86.).

[27] 이종규 외, 앞의 책.

그림 3 | 북한 시장 북한원/달러 환율 추세('20~'26, 분기별) 및 쌀 가격('24~'26.4)



자료: 양문수, "북한의 2023~24년 국정 가격 및 임금 인상에 대한 해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9월호, KDI, 2025, pp.3-18.

주: 쌀가격은 평양·혜산·신의주 월평균값
자료: DailyNK

다. 북한경제의 정책 기조

➲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와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자력갱생형 성장전략과 재정지출 확대기조를 재확인 (상세내용은 [Box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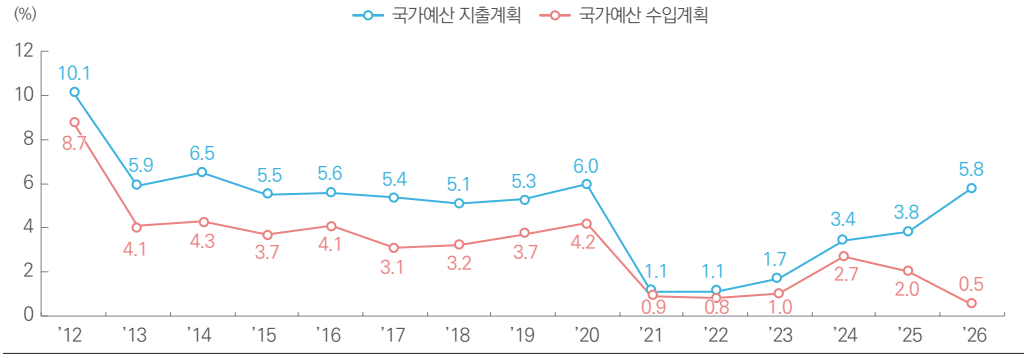
- 새 5개년계획(2026~2030)은 내부 자원 동원에 중점을 두며, 정책 기조는 '안정 공고화'와 '질적 발전'으로 조정된 것으로 평가
  - 핵심 목표로 공업부문 총생산액 1.5배 확대를 설정하되, 기존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효율화 제고를 추진

- 관광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재확인되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을 중심으로 외화조달 기능을 강화할 전망

➲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단기 반등을 국가 주도 성장전략으로 연결하려는 모습

- 2026년 국가예산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5.8% 증가하여 생산·인프라 부문에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계획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제건설 자금이 지출의 43.8%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민생 관련 부문 (교육·보건·농업)이 모두 전년대비 5~6% 증액됨
  - 다만, 세입 증가가 0.5%에 그치는 상황에서 지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재정 운용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그림 4 | 국가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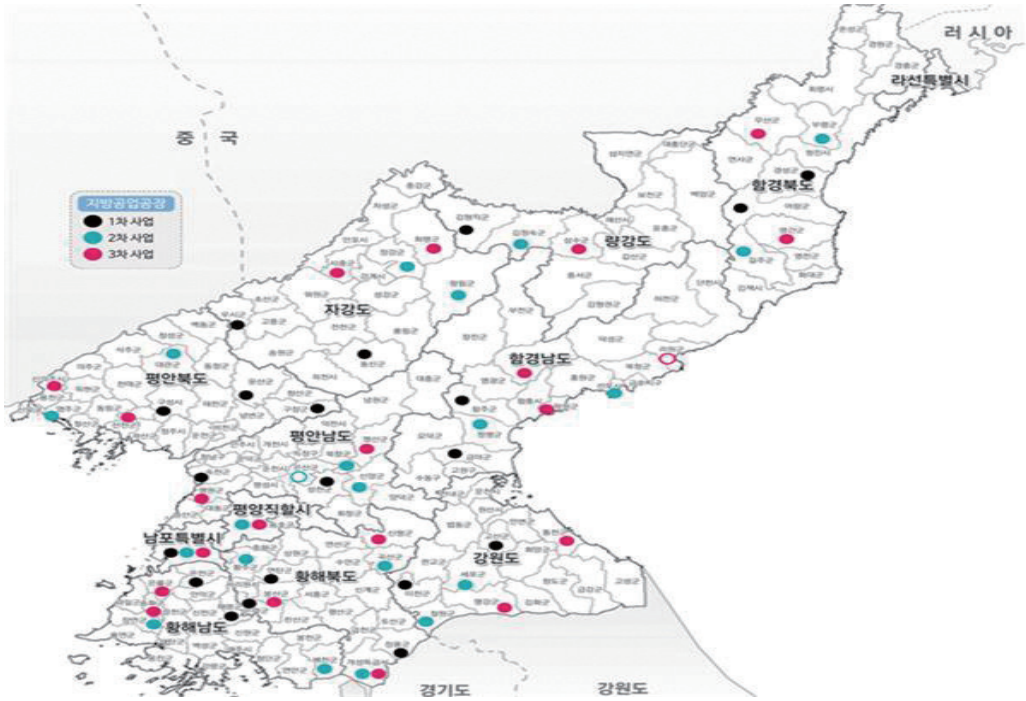


주: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 예결산 발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지역 격차 완화와 민생 안정 목적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 진행

-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10년(2024~2033년) 안에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차년도(2025) 사업지 선정은 1차년도(2024)에 비해 보다 외곽 및 남북접경지역으로 확장되었고, 3차년도(2026) 사업지 선정은 공장과 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패키지형 건설'로 확대

그림 5 | '지방발전 20×10 정책' 1·2·3차년도 대상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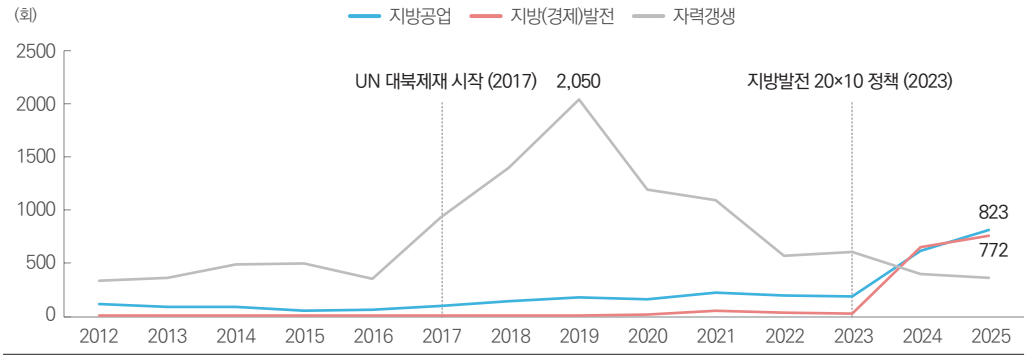


자료: 김두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실적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4월호, KDI, 2026, pp.43-56.

• 노동신문 언급 횟수를 보면, 2017년 대북제재 이후 급증했던 '자력갱생' 언급은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2023년 이후 '지방발전'과 '지방공업' 언급은 크게 증가

- 북한의 공식 경제담론에서 자력갱생이라는 포괄적 구호보다 지방공업 육성, 지역 생산기반 확충, 민생 개선 등 구체적 정책 과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
- 자력갱생 노선의 포기를 의미하기보다는, 자력갱생 기조를 지방 단위 생산·공급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하는 흐름으로 해석됨
- 다만 지방발전 정책은 지역 격차 완화와 민생 안정을 내세우는 동시에, 지방공업 생산품을 국가 공급망에 편입함으로써 국가 주도 생산·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성격도 지님

그림 6 | 북한 노동신문에 나타난 지방발전 언급 횟수



자료: 황진태, "포스트 남북관계 국면에서 한반도 공동성장의 경로모색",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114차 통일학포럼, 2026.4.3.

[Box 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주요 내용

➲ 북한은 2026년 3월 22~23일 양일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를 개최

- 경제 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 결의와 2025년 국가예산 집행결산 및 2026년 국가예산 심의가 이루어짐

➲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을 통해 대외 제약 장기화를 전제로 한 자력갱생형 성장 전략을 재확인

- 북한은 이전 5개년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 '개척기'를 지나 '고조기'에 진입했다고 자평하며, 새로운 5개년계획의 경제과업을 제시
  - 대북제재 장기화 등 적대적이고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전제로 하여, 외부 자본·기술 유입보다 내부 자원 동원과 자체 생산기반 강화에 중점
  - 이에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은 대외 개방 확대보다 '자력갱생'에 기반한 방어적이고 점진적인 성장 전략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
- 핵심 목표로 5개년계획 기간 내 공업부문 총생산액 1.5배 확대 설정
  - 북한이 공업 정상화와 생산능력 제고를 경제계획의 중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제재와 자원 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목표는 대규모 신규 투자보다 기존 생산공정의 개건·현대화와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추진될 가능성

➲ 2026년 국가예산은 새로운 5개년계획 첫해의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출을 선행 확대하는 특징

- 2026년 국가예산 수입 계획은 전년대비 0.5% 증가에 그친 반면, 지출 계획은 5.8% 증가
  - 김정은 집권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비동조 구조를 보임
  -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재정역할 확대 조치로 해석
- 지출 구조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 부문이 동시에 중시
  - 국방비는 전체 지출의 15.8%를 차지하여 핵 억제력 강화와 군사력 유지 기조를 뒷받침
  - 경제건설 지출은 4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계획 집행에 재정 투입을 집중
  - 주요 부문의 인민경제사업비는 6.3%, 농업사업비는 5.7% 증액되어 산업기반과 식량 생산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
- 다만 세입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재정 운용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에 나타난 주요 예산 지출

국가예산지출	국방비	사회주의경제건설	기본건설자금	인민경제사업비	농업사업비
5.8% (전년대비)	15.8% (지출비중)	43.8% (지출비중) 5.5% (전년대비)	4.9% (전년대비)	6.3% (전년대비)	7.3% (전년대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03 북한의 인구동향

가. 북한의 인구통계

➲ 북한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인구 통계는 매우 제한적이고 연속성과 세부성도 부족

- 북한이 국제기구와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인구·사회 통계는 30여년간 5건에 그침
  - 1993년과 2008년 유엔인구기금(UNFPA)과 실시한 인구 총조사, 2014년 UNFPA와 실시한 인구 표본조사 외에는 공식 인구통계가 부재하며, 이후의 모든 수치는 추계치
  - 2017년 다중지표군표집조사(MICS)와 2021년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가 부분적·간헐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정기적·표준화된 방식으로 공표하는 체계는 부족

- 본 장에서 활용하는 인구 통계는 국가데이터처와 유엔 등 다양한 기관의 추계에 의존하며, 기관 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장의 수치는 절댓값보다는 추세와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필요

표 2 | 북한의 주요 인구·사회 통계 현황

자료명	작성 연도	작성 주체	주요 내용
1993 북한 인구조사	1993년	북한·유엔인구기금 (UNFPA)	전국단위 인구규모·구조 기준 제시
2008 북한 인구조사	2008년	북한·유엔인구기금 (UNFPA)	총인구, 성·연령구조, 지역 인구분포 제시
2014 북한 인구 표본조사	2014년	북한·유엔인구기금 (UNFPA)	북한의 사회, 경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조사
다중지표군 표집조사 (MICS)	2017년	북한·유엔아동기금 (UNICEF)	모성·아동보건, 영양, 예방접종, WASH(물, 위생시설, 개인위생) 등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 (VNR)	2021년	북한 정부	SDGs 이행 현황과 공식 정책목표 제시

나. 총인구와 인구구조[28]

➲ 북한의 총인구는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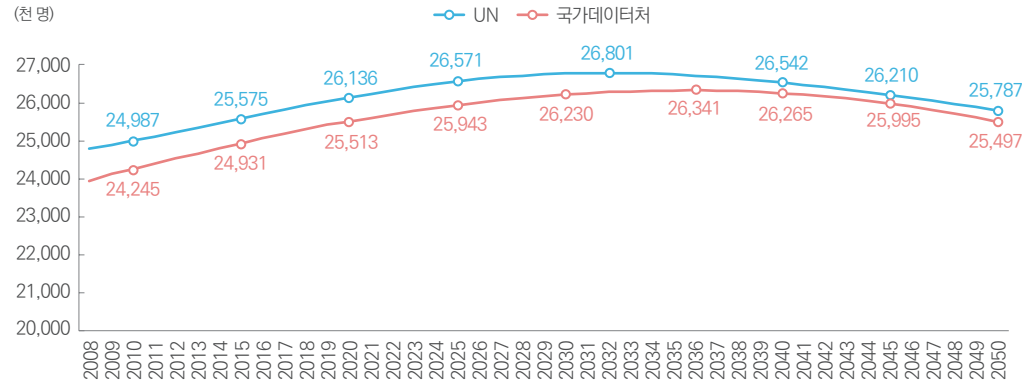
- 2025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594만명으로 남한(5,169만 명)의 절반 수준
  - UN은 2025년 북한의 총인구를 2,657만명으로 추계
  - 총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2030년대 중반 정점 이후 감소 가능성이 제기

[28] 이하에서 인구 통계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를 의미함.

- 국가데이터처 추계는 2036년 2,634만명으로 인구 정점에 도달한 뒤,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UN의 경우 2032년 2,680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7 | 북한의 총인구 추계 (2008-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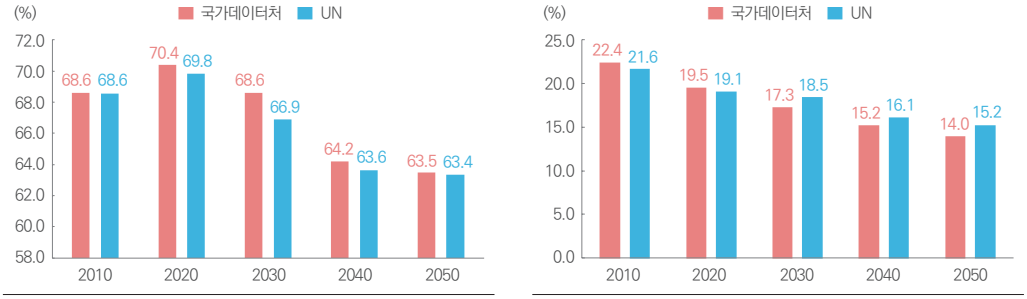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24)*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음

- 유소년 인구(0-14세) 비중은 이미 20% 아래로 떨어졌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도 감소 국면에 진입
  - 유소년 인구비중(%): ('21년)19.3→('22년)19.1→('23년)18.9→('24년)18.7→('25년)18.5
  - 생산가능인구 비중(%): ('21년)70.5→('22년)70.3→('23년)70→('24년)69.8→('25년)69.7

- UN 역시 유소년 인구 비중이 2020년 19.1%에서 2025년 18.9%로 감소하고, 고령층(65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2020년 11.1%→2025년 12.7%)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진단

그림 8 | 북한의 생산가능인구(좌) 및 유소년 인구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24)*

다. 출산율 및 모성 통계

➲ 합계출산율(TFR)은 대체출산율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UN DESA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 약 2.92명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1998년 1.99명으로 처음으로 1명대 진입한 이후, 2025년 현재 1.77명으로 예상
  - 남한(2025년 0.8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20년 이상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따라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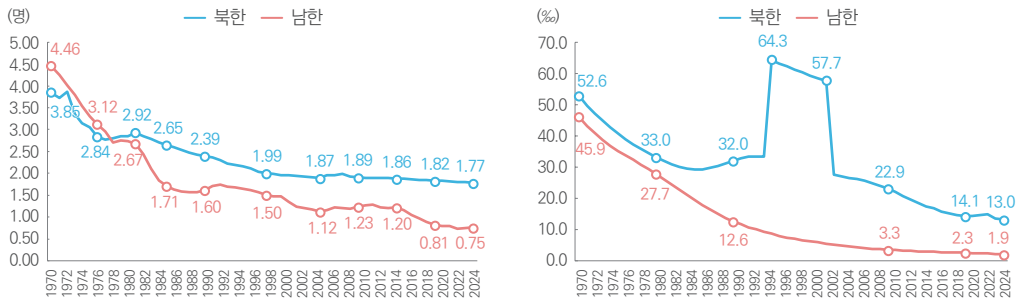
- 다만, 이주영·김선중(2023)은 북한이탈주민 대면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0년대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1.3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발표
  - 이에 따르면 북한의 총인구 규모는 공식 추정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29]

➲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급등 이후 남한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

-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등
  - 영유아 사망률(‰): ('70년)52.6→('80년)33.0→('90년)32.0→('95년)64.3→('02년)57.7

- 2025년 현재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13.0으로 추정되어 남한과의 격차를 보여줌
  - 남한(1.9)과 비교하면 북한은 약 6.8배 높은 수준이며, 이는 남북한 간 모자보건, 의료 접근성, 영양상태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9 | 남북한 합계출산율(좌) 및 영유아 사망률 비교



주: 북한은 고난의 행군(1990년대 중후반)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급등
자료: 국가데이터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24)*

[29] 이주영·김선중,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 BOK 경제연구 2023-29호, 한국은행, 2023.

➲ **이상의 통계는 북한이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했으며, 인구 요인이 향후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

- **총인구 증가세 둔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고령층 확대가 동시에 진행**
  - 인구추계 기관간 편차는 노동공급 기반 평가의 불확실성을 시사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저출산 추세와 총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추세는 일관되게 추정됨

- **특히 낮은 소득 수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노동공급, 부양부담, 성장잠재력에 복합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는 노동투입 확대에 기반한 성장 여지를 축소시키므로, 북한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실질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04 인구구조 변화의 북한 경제성장 영향 분석

가. 선행연구

➲ 북한의 경제성장경로에 관한 분석은 주로 한반도 통일·남북경협의 효과를 추정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왔으며, 성장회계모형이 주요 분석모형으로 활용됨

- Kim, Kim, and Lee(2007)는 성장회계모형을 적용해 북한 경제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30]
  - 산업별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1954년부터 1989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고, 노동-자본-생산성 기여도를 분해하여 확인

- 국회예산정책처(2014)는 한반도 통일 시 예상 GDP를 성장회계모형으로 분석[31]
  - 2015년 통일 가정 시 2016~2060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북한지역에서 총 1경 8,243조원의 실질 GDP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 산출

- 최장호·김범환(2017)은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이 남북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장회계모형 사용[32]
  - 실제로 추진되었거나 검토 중 중단된 사업을 선정하여, 30년(2018~2047년) 간 남한과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변화 분석

➲ 다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거시경제적 성장경로 추정에 초점을 두어,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

- 이에 본고는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기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북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나. 분석방법과 가정

➲ 인구구조 변화가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솔로우 성장회계 방정식을 이용하여 북한의 실질 GDP 증가를 분석

$$Y = A \cdot L^{(1-\alpha)} \cdot K^{\alpha}$$

Y=실질 GDP, A: 생산성, L: 노동력, K: 자본

α: 자본소득분배율, $1-\alpha$: 노동소득분배율

  - 이를 변환하여 실질 GDP 증가율을 인구 기여와 자본+생산성 기여로 분해

$$\frac{\triangle Y}{Y} = (1-\alpha) \cdot \frac{\triangle L}{L} + \alpha \cdot \frac{\triangle K}{K} + \frac{\triangle A}{A}$$

(= 인구 기여) (= 자본+생산성 기여)

---

[30] Kim, Kim, and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5(3), 2007.

[31] 국회예산정책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2014.

[32] 최장호·김범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제17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북한의 자본스톡 및 생산성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 추정 대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인구 기여분의 추세적 변화를 분석

- (성장률) 2024년까지 한국은행 추정치 사용, 2025년 이후는 연평균 1~3% 시나리오 설정
- (노동력) 노동력 증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노동소득분배율) 공식 통계가 부재하여 남한의 노동소득분배율(0.7)을 대용[33]

다.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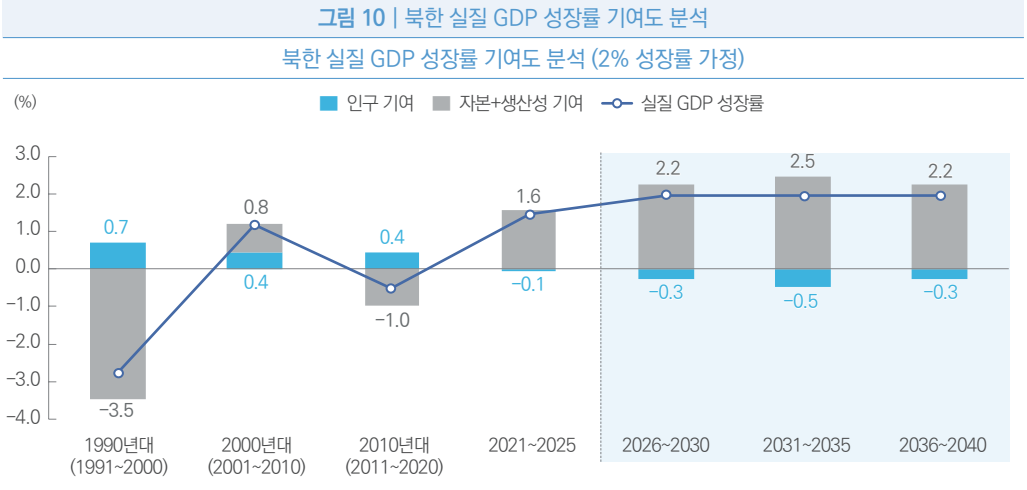
분석 결과, 북한의 인구 보너스 효과[34]는 2020년 전후 소멸한 것으로 추정

• 인구 기여는 1990~2010년대 양(+)의 값을 보였으나, 2021~2025년 구간부터 음(-)의 값으로 전환

- 1990년대 +0.7%, 2000년대 +0.4%, 2010년대 +0.4%로 양(+)의 기여를 보이며 인구구조가 성장에 우호적으로 작용
- 2021~2025년 구간부터 −0.1%로 전환되어,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

• 자본과 생산성 기여는 1990년대 −3.5%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이는 '고난의 행군' 영향으로 해석되며, 2021~2025년에서는 주요 성장동력으로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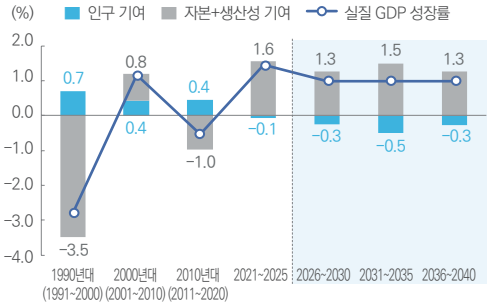
그림 10 | 북한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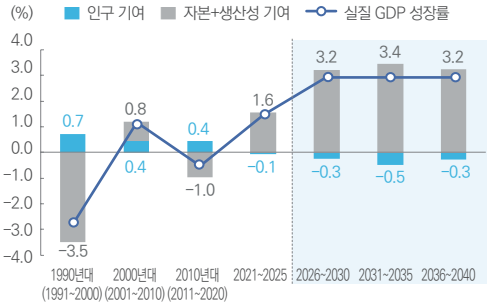
[33] 참고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베트남, 미얀마 등의 노동소득분배율을 50~60% 내외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북한의 노동소득분배율을 0.5~0.8로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문의 분석 결과와 전반적인 추세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음.

[34] 인구 보너스(Bonus) 효과란 생산가능인구 비중 확대가 유소년 부양비 하락, 노동공급 확대, 저축 여력 증가, 소비기반 확대 등으로 이어져 성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현상. 반대로 인구 오너스(Onus)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의미함.

북한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분석 (1% 성장률 가정)



북한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분석 (3% 성장률 가정)



주:1) 음영은 시나리오 분석 구간
2) 인구통계는 시계열을 고려하여 UN의 인구 추계 사용
3)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까지 한국은행의 추정치 사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성장전략 측면의 시사점

2026년 이후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36~2040년 구간의 인구 기여분은 −0.3%로 추정
- 북한이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오너스를 상쇄할 만큼의 자본+생산성 기여가 필요
  - 1% 성장 가정 시 1.3%, 2% 성장 가정 시 2.2%, 3% 성장 가정 시 3.2%의 자본+생산성 기여 필요

그림 11 | 북한 경제성장 시나리오별 요구 자본+생산성 기여

북한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분석 (통합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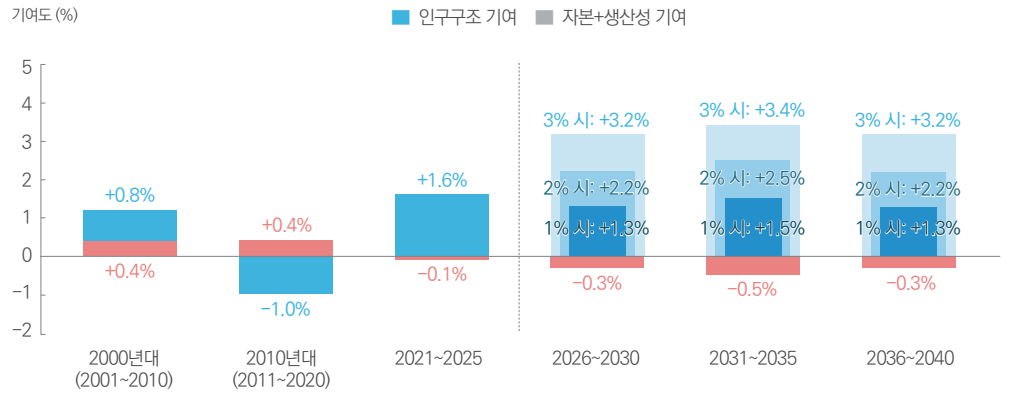


그림: 국회예산정책처

북한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과 기술·생산성 제고의 역할이 더욱 중요

-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노동 투입 확대에 기반한 성장은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
  - (노동 측면) 보건·영양·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노동력의 숙련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자본 측면) 노후 생산설비의 현대화, 산업 인프라 확충, 투자재 공급 안정화 등을 통해 물적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 (기술 측면) 생산공정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대외 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제한된 노동과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북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인구 오너스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지에 좌우**
  - 북한의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내부 자원만으로 이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
  - 중장기 성장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자원 동원뿐 아니라 대외협력과 투자 유입을 통해 자본·기술 기반을 보완할 필요

- **대외협력과 투자 유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을 낮추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 이러한 점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통계 작성과 데이터 개방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자본축적과 생산성 제고 여건을 뒷받침하는 기초 제도 조건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Box 2] 성장여건 개선을 위한 데이터 개방의 사례

중장기 성장전략에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이 커짐

- 통계 투명성과 데이터 개방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서,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성장 여건 개선과 연결될 수 있음
  - (자본축적 경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거시경제 통계 공표는 투자자의 정보 불확실성을 낮추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 향후 대외협력과 자본·기술 유입의 신뢰 기반으로 작용
  - (생산성 제고 경로) 인구·지역·빈곤 등 기초통계 구축은 정책 대상과 개발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보건·교육·인프라 등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인적자본과 생산성 제고의 기반 형성

➲ **베트남 사례는 통계 표준화가 대외개방 전략과 결합될 때 투자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를 높이는 보완적 제도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면서, 무역·투자 개방과 함께 통계 체계의 국제화도 병행하여 추진
  - 2019년 7월 IMF의 e-GDDS[35] 체계에 따른 국가요약데이터페이지(NSDP)를 공식 개설[36]
  - SDDS[37] 진입을 목표로 통계 공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음
- 1987년 외국인투자법 발효 이후 FDI 유입이 본격화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 제조업 기반 확대, 대외관계 정상화, 통계 투명성 제고가 함께 작용하면서 투자환경 개선
  - 베트남의 FDI 누적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530억 달러이며, 특히 2025년 기준 FDI 유입액은 27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38]
  - 1993년 베트남의 실질 1인당 GDP는 약 224달러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4,018달러로 증가하여 약 18배 확대

➲ **페루의 사례는 통계 표준화가 경제개혁의 일부로 추진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39]

- 1996년 IMF SDDS 가입 이후 통계 공표체계를 정비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정안정화 정책과 거시경제 제도개혁을 병행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
  - 2003년 IMF 준수보고서(ROSC) 데이터 모듈 평가에서 대부분의 SDDS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
  - 1999년 재정책임법 도입, 2002년 인플레이션 목표제 시행 등 제도개혁과 통계 표준화가 결합되면서 대외자본 유입 및 민간투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 이러한 정책·통계 신뢰성 개선을 바탕으로 2005~2014년 연평균 GDP 성장률 6.3%를 기록하며 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

---

[35] e-GDDS(Enhanced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향상된 일반데이터공표기준). IMF가 1997년 도입한 GDDS를 2015년 개편한 것으로, 실물·재정·금융·대외 부문과 인구·사회 통계 등 거시·금융 통계 전반을 포괄하며 핵심 지표를 표준 형식의 '국가 요약 데이터 페이지(NSDP)'로 공표하도록 함. IMF 데이터공표기준의 기초 단계(e-GDDS→SDDS→SDDS Plus)로서, 가입은 통계 투명성 제고 의지를 보여주고 데이터의 적시성·비교가능성을 높여 투자자의 정보 불확실성을 낮추는 의미가 있음.

[36] IMF, "Vietnam Implements the IMF's Enhanced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2019.7.17.

[37] SDDS(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특수데이터공표기준). GDDS가 통계 시스템 구축 단계에 있는 국가를 위한 일반 기준이라면, SDDS는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국가들을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공표 주기·시의성·사전 공표일정 고지 등에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함.

[38]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5: Country Fact Sheet – VietNam", UN, 2025.

[39] Rossini, Renzo, and Alejandro Santos, "Peru's Recent Economic History: From Stagnation, Disarray, and Mismanagement to Growth, Stability, and Quality Policies," Peru: Staying the Course of Economic Success, IMF, 2015, pp.13-48. (https://doi.org/10.5089/9781513599748.071)

➲ **캄보디아는 내전 종식 이후인 1990년대 UN의 지원 하에 국가통계청을 재건**

- 1998년 인구총조사를 진행하여, 내전 이후 국가 차원의 인구·가구 기초자료를 확보
  -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지원을 받아 국제방법론을 적용한 지역별 빈곤 분포 데이터를 생산
  - 이러한 빈곤 지도와 사회경제조사 자료는 지역별 빈곤 수준과 취약계층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지원 배분과 개발정책의 근거자료로 기능
  - 특히 지역별 빈곤 분포 데이터는 사회경제개발계획 1996~2000 수립에 활용되어, 통계가 개발계획 수립의 기초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가구소득, 소비, 빈곤, 생활수준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축적
  - 사회경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한 캄보디아의 국가 빈곤율은 2009~2019년 기간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 기준 국가 빈곤율은 17.8%
  - 통계체계 재건이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정책과 사회보호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캄보디아는 2021년 이후 최빈국 졸업 기준 3개 지표를 모두 충족하기 시작
  - 2024년 기준 캄보디아의 1인당 소득은 1,983달러로, 최빈국 졸업 기준인 1,306달러를 초과[40]

➲ **이상의 사례는 통계 투명성과 데이터 개방이 자본축적과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베트남과 페루 사례는 거시경제 통계의 표준화와 예측 가능한 공표 체계가 대외개방, 경제개혁, 투자환경 개선과 결합될 때 정책 신뢰도와 대외자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
  - 통계 표준화는 투자자와 국제기구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
  - 다만 통계 공개만으로 투자 유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대외개방, 거시경제 안정화, 제도개혁 등이 함께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강화
- 캄보디아 사례는 인구·가구·빈곤 등 기초통계 구축이 정책 대상과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인구총조사, 사회경제조사, 빈곤 지도 등은 지역별 취약계층과 개발 수요를 식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이러한 자료는 보건·교육·인프라 등 공공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적자본과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정책 인프라로 기능

[40] United Nations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UNCDP), "2025 Monitoring Report: Cambodia", UN, 2025.

05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북한경제는 팬데믹 기간의 위축에서 벗어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구조적 회복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23년 이후 북한경제는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며 단기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됨
- 대중 교역 회복과 북러 협력 확대는 최근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이 성장 제약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대북제재, 국제 공급망 단절, 자본·기술 유입 제한은 북한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

➲ 북한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했으며, 이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북한의 총인구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2030년대 초·중반 이후 감소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됨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하락 국면에 진입한 반면, 고령층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공급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

- 성장회계 분석 결과, 북한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2020년 전후 소멸한 것으로 추정됨
  - 향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할수록 동일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축적과 생산성 제고의 부담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향후 북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노동력 동원보다 인적자본, 물적자본, 기술 활용, 대외협력 여건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큼
  - 다만 대북제재와 국제 공급망 단절을 고려할 때, 내부 자원만으로 생산성 향상과 자본축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대외협력과 투자·기술 유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장 가능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불확실성 완화와 대외협력 기반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대외협력과 투자 유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에 대한 신뢰 가능한 정보 축적과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가 선행될 필요

- 데이터 개방은 북한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자본축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대외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 검토될 수 있음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2026년 5월호 | 통권 제6호

발행일 2026년 5월 22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8-002145-08
ISSN	3059-064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